제주학-언론학 교류 세미나

지역 기록의 시선 '인권 감수성'

2025.11.21.(금) 15:30

제주인권교육센터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제주언론학회 Jeju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Research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한국언론학회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한국방송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제주학-언론학 교류 세미나

지역 기록의 시선 '인권 감수성'

사회 | **오 유 정**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시간	항목	내용
15:00~15:30	등 록	참가자 행사 등록
15:30~15:40	개 회 식	인사말 / 사진 촬영
15:40~16:20	주제 발표	❶ 언론 보도 '인권 감수성'의 현주소와 과제 - **허 찬 행** : (사)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❷ 기후 재난 현장에서 묻는 '사람의 안부': 인권으로 고찰하는 제주 폭염의 기록 - **이 정 원** : (사)한국언론학회 이사
16:20~16:30	자리 정돈	토론 자리 정돈 및 휴식
16:30~17:50	종합 토론	[인권 감수성 중심 제주학-언론학 협력 방안 모색] 좌장	**김형훈** : (사)제주언론학회장 - **윤 희 각**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김 철 웅** : (사)제주언론인클럽 감사 - **신 효 은** : JIBS제주방송 기자 - **문 정 임** : 국민일보 제주 주재 기자 - **오 유 정** :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18:00~	저녁 식사	행사 마무리 및 만찬

2025.11.21. (금) 15:30

제주인권교육센터

※ **행사장 위치**(제주시 중앙로 273 나라키움제주마루 2층)

◀ 발표내용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 제주언론학회 Jeju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Research ·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 한국언론학회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 한국방송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발제 1

언론 보도 ‘인권 감수성'의 현주소와 과제

허 찬 행
(사)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제주학-언론학 교류세미나

2025.11.21.

언론보도 '인권감수성'의 현주소와 과제

허찬행(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1. 언론보도 '인권감수성' 이 필요한 이유

-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전통적 미디어의 영향력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언론이 '무엇을', '어떻게' 보도할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음
- 무분별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새로운 혐오 차별 표현의 문제 또한 지속되고 있음
  - ✓예) 유명인 부부의 갈등과 이혼소송 과정에서 서로가 사적 통신 기록에 대해 폭로전을 하는 과정을 언론은 생중계하듯 여과 없이 보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3자의 성정체성과 같은 내밀한 사적 정보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또한 드라마 홍보자료에서 '힘숨찐(힘을 숨긴 찐따)'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을 일부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기하였는데, '찐따'는 '찐바'라는 일본어의 잔재로 다리 길이가 달라 걸을 때 불편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을 비하하는 단어따.

인권보도준칙 전문(2011년 9월 23일 제정, 2014년 12월 16일 개정)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1. 언론보도 '인권감수성' 이 필요한 이유

- 언론이 인권을 대하는 태도(언론인권센터, 2016)
  - 1세대 인권 – 정치권이자 시민권으로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자유〉에 기원하며, 민주주의 사회에 정치적 참정권 중심. 생명권,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과 학대 및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호, 망명권, 국적권, 혼인권과 가족보호권, 사유재산권,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해당
  - 2세대 인권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서 사회권을 의미. 노동권, 사회보장권, 아동의 권리, 교육권, 건강권, 주거와 의료, 고용, 문화 등 권리
  - 3세대 인권 – 집합적 권리로서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권리. 연대와 환경보호라는 박애의 개념에 기초. 선언적 권리인 경우가 많으며, 법률에 근거한 소극적 형태의 인권보호 보다는 사회적 연대와 집단적 협력에 기초해, 평화권과 환경권, 인도적 원조를 받을 권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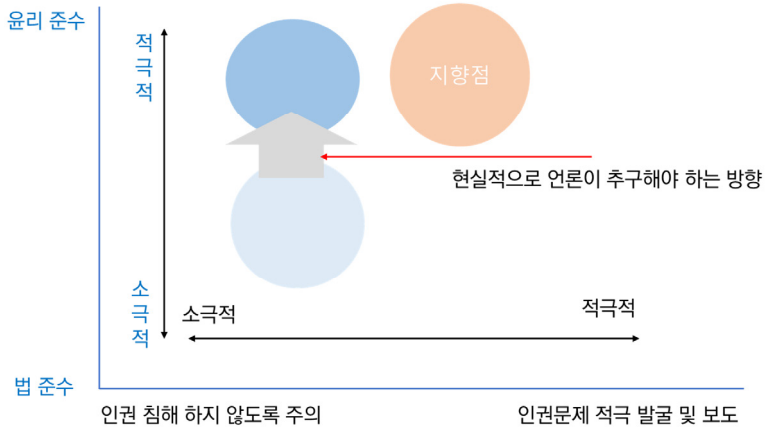
➢ 언론은 1세대 인권에 대해서는 법률적 처벌을 우려하여 보도과정에서 고려, 하지만 2세대와 3세대 인권에 대해서는 보도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함

➢ 취재윤리강령 및 보도준칙은 언론인들이 취재 및 보도시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 이들 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사항을 준수하는 '소극적' 형태의 인권보호와 달리, 위법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일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적극적' 형태의 인권보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 언론보도 '인권감수성' 이 필요한 이유

- 언론이 인권을 대하는 태도
  - ➢ 현실적 모습은 어떠해야 하나

〈그림 1〉 언론 보도의 '인권보호' 실천 방향



1. 언론보도 '인권감수성'이 필요한 이유

- 언론의 윤리강령이나 심의 규정에서는 '인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를테면 〈신문윤리 실천요강〉 16개조 중 '인권'이라 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 존중' 뿐이며,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 10개조 중에서는 제3조(인격권 보호)와 제4조(약자 보호와 차별금지)뿐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총 70개조 중 제21조(인권보호)에서 '인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 제도를 비롯한 언론의 자율 규제가 '언론 인권'에 대한 명확한 명시적인 범위나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사회 영역에서라도 '언론보도의 인권'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언론보도의 '인권감수성' 정도를 평가하고, 언론이 인권 친화적인 보도를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한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언론은 〈인권보도준칙〉을 얼마나 준수하였으며, 인권 친화적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음. 〈인권보도준칙〉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인격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노인 인권',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성적 소수자 인권',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주민 인권' 등 9개 분야에 대해 실천 요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언론이 얼마나 〈인권보도준칙〉의 실천 요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표 설계를 시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함.

2. 언론보도 인권지수 설계 과정

1. 초안 설계 및 구성

-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을 기반으로 '언론보도 인권지수'를 토대로 다소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조항을 배제하고 초안 설계
- 보도일반 적용 모니터링 기준 10개 문항과 12개 분야별 각 5개 문항 설계

  ***민주주의와 인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이주민·외국인 인권, 노인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성소수자 인권,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인권, 노동 인권, 재난보도와 인권, 자살보도와 인권, 범죄·성폭력 보도와 인권**
- 보도일반 기준이란, 특정 주제 분야(예-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또는 특정 토픽(예-특정 시기 범죄, 성범죄, 재난 등의 특정 이슈) 중심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뉴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어느정도 보편성을 띤 기준 문항
- 12개 분야별 인권은 〈인권보도준칙〉의 분야별 요강인 민주주의와 인권(제1장), 인격권(제2장), 장애인 인권(제3장), 성평등(제4장), 이주민과 외국인인권(제5장), 노인 인권(제6장),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제7장), 성소수자 인권(제8장),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인권(제9장) 등 9개 분야에 인격권을 제외하고, 노동인권, 재난보도와 인권, 자살보도와 인권, 범죄·성폭력 보도와 인권 등 4개 분야를 추가하여 구성

2. 언론보도 인권지수 설계 과정

2. 전문가 자문

- 특정 분야의 기사가 아니라, 보도 일반(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배열이 필요한데 초안에 대해 하나의 문항을 통합하거나 불필요한 문항, 추가할 문항, 수정 등에 대한 의견
- 해당 문항 관련해 사례로서 참고할 만한 표현들 예시 추가 의견
- 분야별 모니터링 기준에 대한 문항 수정, 추가, 삭제 및 적합한 사례 추가 등에 대한 의견
- 분야별 모니터링 기준에 노동인권, 재난보도와 인권, 자살보도와 인권, 범죄·성폭력 보도와 인권 등(아~카) 4개 분야를 별도로 추가. 필요여부를 비롯해, 문항 수정·추가·삭제 등 의견
- 〈인권보도준칙〉의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경우 정치뉴스는 모두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로 분류해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지 여부와 민주주의 분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전문가	성별	소속 또는 분야
자문1	남	언론미디어 연구
자문2	남	언론미디어 연구
자문3	여	언론미디어 연구
자문4	여	언론미디어 단체
자문5	여	여성단체
자문6	여	언론미디어 단체
자문7	여	언론미디어 연구
자문8	남	언론미디어 연구
자문9	남	언론인 단체
자문10	여	언론 자율규제 기구

2. 언론보도 인권지수 설계 과정

3. 최종 모니터링 기준 문항

➢10인의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해 기준 마련

문항	예시 또는 사례
1. 성별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혐오를 조장하거나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슬람 테러와 다를 바 없는 조선족 범죄" 등과 같이 특정 종교나 민족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 조장, 이주민 가정의 이슈를 다룰 때 국적이나 피부색을 부각
2. 나이를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혐오를 조장하거나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틀딱, 잼미니…
3. 출신지역·인종·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혐오를 조장하거나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김치도 못 먹는 미국인 아내, 베트남 아내...
4. 장애·종교·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혐오를 조장하거나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병신 같은 짓", "애자처럼 행동했다"와 같이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나 정치인 막말 보도 등을 여과 없이 인용 보도하는 등, '조현병 환자의 흉기 난동', '가난은 게으름 때문'과 같은 편견 조장 등
5. 학력이나 소득 ·재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혐오를 조장하거나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고급 아파트 주민'
6. 직업이나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혐오를 조장하거나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영세 자영업자, 알바(생),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등
7. 특정 지역 또는 지역주민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거나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홍어, 갱상도, 전라디언, 멍청도, 삼천포로 빠진다 등의 비하 표현, 불필요하게 지역명을 사용하는 보도
8.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보도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지 않았다	공인일 경우는 실명, 공인이나 공적 인물이 아닌 경우 실명이나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사진, 주변 단서 등
9.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는 보도 대상의 지극히 사적인 사항을 보도하지 않았다	취향, 인간관계, 질병유무, 주변 평판, 얼굴이나 이름 등의 신상정보, 사진 등,
10.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이 자극적이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본문 내용과 무관 혹은 과장된 제목 포함, 불필요한 자극적인 표현, 사례: 사안과 관계없는 성적·신체적 요소 강조하여 신체를 대상화, 삽화나 영상 이미지 등

2. 언론보도 인권지수 설계 과정

분야별 기준 - 1. 장애인 인권

문항	예시 또는 사례
①장애인의 행위를 차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 시위에서 시민 불편만을 강조하고, 장애 차별 현실과 개선방향은 다루지 않음
②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병신, 애자, 불구, 절름발이, 외눈박이, 귀머거리, 정신병자 등
③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관용구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꿀 먹은 벙어리, 눈먼 돈, 절름발이 등
④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부각하지 않았다.	
⑤장애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하거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 보호자나 가족의 어려움, 장애를 극복하고 무언가 성취했다는 식의 보도

분야별 기준 - 2. 성평등

문항	예시 또는 사례
①사안의 본질과 관계없이 또는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하지 않았다.	-여교사, 여검사 등
②특정 성을 희화화, 조롱, 모욕, 멸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OO남, OO녀, OO충 등
③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재벌가 며느릿감, 국민 며느리, 현모양처 등
④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여성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문제가 있다는 표현 등)
⑤보도 대상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몸매, 외모, 신체 등을 묘사

2. 언론보도 인권지수 설계 과정

분야별 기준 - 3.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문항	예시 또는 사례
①이주민·난민·외국인을 폄훼, 모욕, 비하, 조롱, 차별, 위협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조선족(중국동포로 표현해야 함), 이슬람 문화권 출신들을 테러리스트처럼 취급 등
②이주민·외국인·난민을 우리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하지 않았다.	- 잠재적 범죄자나 테러스트
③확실한 근거없이 이주민·외국인·난민을 재난이나 감염병 등의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몰아가지 않았다.	-
④이주민·외국인·난민을 한국문화에 동화·흡수하도록 유도하거나 일방적 관점으로 희화화, 동정의 대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한국인 다되었네, 김치를 잘 먹는 등
⑤이주민·외국인·난민 관련 행사·미담·사건 사고 등을 다룰 때 흥미 위주로만 보도하지 않았다.	-

분야별 기준 - 4. 노인 인권

문항	예시 및 사례
①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았다.	-
②노인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다루지 않았다.	- 복지 혜택에 의존, 노인 의료비 폭탄, 회적 부담 등
3. 노인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노인 운전 미숙, 참을성 부족 등
4. 노인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심어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늙은 것도 서러운데, 노쇠한 몸을 이끌고 등 노인의 업무 능력과 노동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조장, 용돈 벌고 와 같이 낮은 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식의 고정관념
5. 노인을 희화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꼰대, 틀딱, 할매미 등 비하단어 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2. 언론보도 인권지수 설계 과정

분야별 기준 - 5.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문항	예시 또는 사례
①아동과 청소년을 비하하고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잼민이, 급식충, 등골 브레이커, 초글링, 중2병, 초딩, 중딩, 고딩 등
②무분별한 신조어와 특정 행동을 합성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칭하지 않았다.	- 주린이, 요린이, 토린이 등
③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를 훈육·체벌과 같은 표현으로 정당화하지 않았다.	- 가정 폭력을 '가정 교육'이라고 표현
④아동·청소년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나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게 보도하지 않았다.	-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일 경우 보호자 동의 없는 경우 등
⑤아동·청소년 관련 보도에서 가족의 형태·국적·체류자격 등을 부각하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 피해자 또는 일탈적 행동을 다룰 때 가족형태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각

분야별 기준 - 6. 성소수자 인권

문항	예시 또는 사례
①성소수자를 비하 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동성연애(자) => 동성애(자), 성적 취향, 성적 기호, 성적 선호=> 성적 지향. 호모·게이 등 => 성소수자
②성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않았다.	- 저주 받은 존재, 재앙
③사안과 무관하게 보도 대상의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았다.	- 이성에는 관심이 없다 등
④사안과 무관하게 성소수자의 젠더를 부각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동성 간 관계가 짐작되는 진술, 남성인 공범과 연인관계, 동성애를 하는 민낯 등
⑤성소수자에 대한 비하·혐오 등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다.	- 댓글이나 온라인 게시글 등을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 보도하는 경우

2. 언론보도 인권지수 설계 과정

분야별 기준 - 7.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인권

문항	예시 또는 사례
①북한이탈주민의 신상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 이름은 익명으로 했지만 얼굴을 공개
②범죄나 사회 부적응 등 일부 사례를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보도하지 않았다.	- 탈북자들은 범죄 유혹에 약하다
③북한의 경제 상황이나 문화적 특성을 비하하거나 희화화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④불분명한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
⑤북한이탈주민을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하지 않았다.	- 북한 관련 일명 '카더라' 식의 보도

분야별 기준 - 8. 노동 인권

①노사 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를 하지 않았다
②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③특정 노동을 폄훼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④고용형태나 임금격차 등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능력 문제로 정당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특정 직업에 대해 부정적 또는 편견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2. 언론보도 인권지수 설계 과정

분야별 기준 - 9. 자살보도와 인권

문항(예시 또는 사례)
①자살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극단적 선택, 동반자살, 투신자살 등) ②구체적인 자살 방법 묘사나 자살 도구·장소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③자살이 유일한 문제해결 방법인 것처럼 보도하지 않았다. ④자살 동기를 단정하여 보도하지 않았다. ⑤사안의 본질과 관계없는 고인이나 유가족의 사적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인간관계, 사회적 평가 등등)

분야별 기준 - 10. 범죄·성폭력 보도와 인권

문항(예시 또는 사례)
①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직접 언급이 없어도 누군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가해자나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지 않았다. ③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행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④범죄 또는 가해자나 범죄자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리벤지 포르노, 배신에 대한 보복) ⑤피해자를 주체로 한 사건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3. 모니터링 진행 과정

1.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10명의 청년 모니터링단 모집 및 선발
- 5회의 교육

① 언론·미디어와 정치: 공론장으로서의 미디어, 언론의 정치 보도의 문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언론보도

② 언론·미디어와 노동 인권: 언론·미디어가 노동과 노동자를 다루는 방식, 언론·미디어의 노동 인권 존중을 위한 방향

③ 언론·미디어와 인격권: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성립 요건, 피해 유형과 사례

④ 언론 윤리와 자율규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운영 시스템(모니터링 방식-대상 선정 방식, 의사결정 방식 등)

⑤ 언론의 인권감수성과 인권보도준칙 - 인권 감수성이란, 인권보도 준칙, 언론보도의 인권 지표 문항과 모니터링 교육

3. 모니터링 진행 과정

2. 모니터링 대상 선정 및 방법

- 8월 중 한 주를 선정 5일치(8월 18일 ~ 22일, 월,화,수,목,금)보도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진행
- 포털 다음, 네이버, 구글(크롬) 뉴스를 대상으로 일치된 시간대에 게시된 보도 선정(시간대는 추후 논의 후 확정)
  - ➢ Daum - 주요뉴스, 추천 뉴스 등 50여개
  - ➢ 네이버 - 뉴스 -> 언론사 전체 -> 주요뉴스 약 105개
  - ➢ 구글(크롬) -> 뉴스 -> 헤드라인 약 108개
- ※오전, 오후 특정 시간대를 선정하여 10명의 모니터원이 1일 2회 모니터링 진행 예정(1인이 다음, 네이버, 구글 각각 1회씩 담당, 1인 당 약 250건)

		월	화	수	목	금
오전	다음	모니터원1	모니터원2	모니터원3	모니터원4	모니터원5
	네이버	모니터원2	모니터원3	모니터원4	모니터원5	모니터원6
	구글	모니터원3	모니터원4	모니터원5	모니터원6	모니터원7
오후	다음	모니터원6	모니터원7	모니터원8	모니터원9	모니터원10
	네이버	모니터원7	모니터원8	모니터원9	모니터원10	모니터원1
	구글	모니터원8	모니터원9	모니터원10	모니터원1	모니터원2

3. 모니터링 진행 과정

2. 모니터링 대상 선정 및 방법

- 시기적으로는 특검 관련 뉴스 비중이 많음. 특히 다음의 경우 특검과 정치 뉴스가 90%가까이 됨. 오전/오후 시간대의 경우 중복 기사의 문제
- 안정적 샘플링의 한계 - 포털별 업데이트 주기가 동일하지 않고, 모니터원에 따라서 같은 포털 뉴스라도 배열이 달라질 수 있음. 예를들어 오전 11시 구글 주요 뉴스=>헤드라인 100여개 기사를 건 별로 모니터링 하는 동안 100여개 기사 배열이 달라질 수 있음
- 코더간 신뢰도 문제 - 최소 2~3회의 시험 모니터링과 토의를 통해 최대한의 균일한 결과 도출 필요. 방학 중 모니터링 활동을 종료하기 위한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지만, 1주일 안에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예상

코더 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험 모니터링과 토의 시간을 갖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니터링 대상 보도 샘플 확보 후 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

3. 모니터링 진행 과정

3. 수정안 및 계획

- 네이버 '랭킹 뉴스 ' 를 대상으로 1월 ~ 5월 평일(5일) 모니터링 진행
  - ➢ 포털 중 네이버를 통한 뉴스 이용률이 가장 높음(*다음 슬라이드 랭킹뉴스 집계 방식 참고*)
  - ➢ 네이버 랭킹 뉴스는 콘텐츠 제휴 언론사(다음과 구글에는 해당 기능이 없음)의 가장 많이 이용한 기사 5개 씩을 게시하고 있으며, 지난 시기 날짜도 확인 가능(약 81개 언론사-영자 신문 제외-의 이용률이 높은 상위 5개씩 기사 게시됨)
  - ➢ *종합 10개, 방송.통신 14개, 경제 11개, 인터넷 8개, IT 5개, 매거진 14개, 전문지 10개, 지역 12개, 포토 3개 등 85개사(영자신문 1개와 포토 3개사 제외)

1월 ~ 6월 중 연휴나 특별한 이슈가 없는 평일을 중 하루를 모니터링 대상 보도를 선정

- 1월 첫번째 월요일(1월 6일) / 2월 두번째 화요일(2월 11일) / 3월 세번째 수요일(3월 19일)
- 4월 네번째 목요일(4월 24일) / 5월 다섯번째 금요일(5월 30일)
- 하루 약 400건 – 2인이 나누어 모니터링 (1인 약 200건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예상)

- 참고 – 네이버 랭킹 뉴스 집계 방식 https://news.naver.com/ombudsman/rankingHelp

다른 언론사 랭킹 더보기를 클릭하여 맨 아래까지 랭킹뉴스에 올라온 뉴스들을 확인 가능(언론사별 5개씩 올라옴)

모니터링 대상 날짜 선택

메일
카페
블로그
스토어
뉴스
증권
부동산
지도
웹툰
지지직
임영웅 신규 2집 앨범 IM HERO 2 발매
HERO의 귀환, 다시 영웅
N 뉴스
언론사별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랭킹
신문보기
오피니언
TV
팩트체크
8.29(금)
언론사편집
구독설정
신문1면 모아보기
문화일보
아시아경제
랭킹을 누르면 다음 화면과 같음
언론사별 랭킹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많은 뉴스
헤럴드경제
JTBC
프레시안
다른 언론사 랭킹 더보기
랭킹 뉴스 집계 기준
08월 29일(금)
08월 28일(목)
08월 27일(수)
08월 26일(화)
08월 25일(월)
활성화 안될 때까지 누르면 전체 언론사 상위 5개 기사가 다 보임. 이 중 대상 언론사의 상위5개 기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진행
해당 날짜로 이동

3. 모니터링 진행 과정

MBN
1 "일본보다 협상 능숙" 일본 누리꾼 '부글'…외신도 관심
2025.07.31
2 여배우 저격한 홍준표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 어디…
2025.08.01
3 [단독]"가슴 절제했는데 암 아니야" 검체 바꾼 녹십자, 1개월 …
2025.08.01
4 [속보] 트럼프, 무역합의 안된 인도 25%·대만 20%·남아공 30…
2025.08.01
5 카페서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가담한 사위도 체포
2025.08.01
TV조선
1 [단독] 정동영 '北 접촉신고 폐기 지침' 입수…이적단체·대남 …
2025.08.01
2 강화도 카페서 남편 성기 자른 50대 여성 '살인미수 혐의' 긴급체포
2025.08.01
3 김건희 특검 "1일 尹 체포영장 집행"…尹측 "건강상 수사받…
2025.07.31
4 [단독] 최동석,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피해자가 절대선 아…
2025.07.31
5 백악관 "한국, 역사적인 쌀 시장 개방"…우리 정부와 엇갈린 …
2025.08.01
머니S
1 김치도 못 먹던 미국인 아내, 아이들 데리고 갑자기 출국… "…
2025.08.01
2 "시아버지와 혼인신고, X족보 됐다"… 무슨 일이길래?
2025.08.01
3 "애도 안 낳았는데 살 트고 골반 통짜"… 목욕탕서 며느리 몸…
2025.08.01
4 장원영 시축 의상 해명에도 '갑론을박'… 중국 팬덤까지 '들썩'
2025.08.01
5 [속보] 트럼프 "러시아 행동 역겨워… 제재 부과할 것"
2025.08.01

3. 모니터링 진행 과정

- 1차 시험 모니터링 및 토의
  - ✓ 8월 8일자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지디넷코리아, 매일경제, 데일리안 5개 매체 보도(5개씩 총 25건의 보도)를 대상으로 시험 모니터링 진행
  - ✓ 모니터링 시트에 입력 후 센터 메일(presswatch.korea@gmail.com)로 전송
  - ✓ 화상 간담회에서 토의

- 2차 시험 모니터링 및 토의
  - ✓ 8월 1일자 MBN, TV조선, 머니S, 강원일보, 대전일보(5개씩 총 25건의 보도)를 대상으로 시험 모니터링 진행
  - ✓ 모니터링 시트에 입력 후 센터 메일(presswatch.korea@gmail.com)로 전송
  - ✓ 화상 간담회에서 토의
- 3차 시험 모니터링 및 토의
  - ✓ 8월 5일자 데일리안, 머니S (5개씩 총 10건의 보도)를 대상으로 시험 모니터링 진행
  - ✓ 모니터링 시트에 입력 후 센터 메일(presswatch.korea@gmail.com)로 전송
  - ✓ 이후 화상 간담회에서 토의 / 추가로 대면 간담회를 통해 토의 및 의견 조율

3. 모니터링 진행 과정

- 모니터링 흐름도

기사

해당 기사가 10개 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분야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음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7	문항8	문항9	문항10

준수=1, 미준수=0으로 입력
0인 항목의 경우 특이사항란에 해당 내용 작성

장애인	성평등	이주민	노인	아동청소년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노동	자살	범죄·성폭력

해당 기사가 10개 분야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해당 분야별 5개 문항 모니터링 진행

예시

"대기번호 10만…정부할인 쿠폰 첫날, 접속 과다로 영화관 앱 먹통" → 보도 일반 10개 문항에 대해서만 1과 0 입력

"욕설에 협박·폭행…괴롭힘당해도 갈 데 없는 이주노동자" → 보도 일반 10개 문항 + 이주민 5개 문항에 대해서 1과 0 입력

3. 모니터링 진행 과정

4. 시험 모니터링과 토의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

-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차별·혐오 등의 표현 여부는 단순히 성별이나 연령등이 언급되었다고 해당 문항의 위반은 아님. 차별, 혐오 등의 표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도, 단순히 언급되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거나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는 경우를 위반으로 판단할 것.
  - ✓ 사례1) "카페서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가담한 사위도 체포" =〉 여성 57세, 사위 30대라고 언급한 것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기본 정보이지, 연령에 따른 혐오·차별 등으로 볼 수 없음.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해 60대 남성(또는 60대 여성)이 차에 치어 숨졌다'라는 보도가 성별, 연령 에 따른 혐오.차별이 아닌것과 같음. 만일 이 사건을 다루면서, 50대 여성들의 배우자에 대한 끔찍한 범죄가 문제라는 표현을 했다면, 성별과 연령에 따른 혐오.차별 등의 표현에 해당.
  - ✓ 사례2) "<u>여배우</u> 저격한 홍준표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 어디 갔나" =〉 배우라는 직업은 있어도 '여배우'라는 직업은 없음. 제목뿐만 아니라 기사 본문에서도 '배우 김규리씨' 또는 '배우 정우성씨'와 같이 표현하지, '여배우 김규리씨' 또는 '남배우 정우성씨'와 같이 표현하지 않음. 이처럼 불필요하고,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이 성별, 연령 등의 구분을 하는 경우를 해당 기준 위반으로 판단

3. 모니터링 진행 과정

4. 시험 모니터링과 주요 논의 과정

- ***3,4,5,6번 문항의 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재력·소득·직업·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 혐오 등의 표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도, 단순히 언급되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거나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는 경우를 위반으로 판단할 것.**
  - ✓ **예시-가상의 기사임)** "공장에서 작업자 부주의로 2명 중상"(제목) - "...기계를 작동하는 일을 하는 작업자 A씨가(38세, 남성) 작업도중 통화를 하면서 기계를 멈추지 않아 함께 작업하던 30대 남성 B씨와 40대 여성 C씨가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큰 부상을 입었다..."(기사 본문)

=〉 이 같은 기사는 제목과 본문에서 특별한 문제적 표현은 없음.

- **다음과 같은 제목을 보고 판단해보자.**
  - ✓ "공장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작업자 부주의로 2명 중상" / "공장에서 필리핀 노동자 부주의로 2명 중상" / "공장에서 아르바이트생 부주의로 2명 중상" / "공장에서 계약직 작업자 부주의로 2명 중상" / "공장에서 여성 작업자 부주의로 2명 중상" / "공장에서 불교 신도인 작업자 부주의로 2명 중상" ... **=〉 이 경우는 장애, 출신국가, 고용형태, 성별, 종교 등이 꼭 필요한가? 사고 발생 원인이 '부주의'가 아닌 장애·출신국가·고용형태·성별·종교 등인 것처럼 차별적이지 않은가?**
- **다음은 "공장에서 작업자 부주의로 2명 중상"의 제목은 문제없는 기사 본문이다. 밑줄 친 부분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보자.**
  - ✓ "...기계를 작동하는 일을 하는 작업자 A씨가(38세, 남성) 작업도중 통화를 하면서 기계를 멈추지 않아 함께 작업하던 30대 남성 B씨와 40대 여성 C씨가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큰 부상을 입었다. <u>A씨는 평소 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u>" / <u>A씨는 불교 신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u> / <u>A씨는 필리핀 출신 노동자이다</u> / <u>A씨는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또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u> / <u>해당 작업은 대부분 남성 작업자가 하는 일인데, 사고를 낸 A씨는 여성이었다</u>/ A씨는 60대 고령의 작업자 였다

=〉 이 사안의 핵심은 작업 도중 작업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부주의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지, A씨의 성별, 연령, 장애, 출신국가, 종교, 고용형태 등이 어떤지는 사안과 무관하다 볼 수 있음.

3. 모니터링 진행 과정

4. 시험 모니터링과 주요 논의 과정

✓ **7번 특정지역 또는 지역주민에 대한 혐오·차별 등의 표현 관련**

✓ "경기 용인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 식당으로 돌진…6명 중경상" =〉 여기서 용인은 사고 발생 장소 정보로 통상적인 기사로 문제없음

✓ 카페서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가담한 사위도 체포(MBN) / 강화도 카페서 남편 성기 자른 50대 여성 '살인미수 혐의' 긴급체포(TV조선)

=〉 동일한 사안을 보도하면서 MBN은 '카페서'(범행 장소 정보), TV조선은 '강화도 카페서'라고 제목을 뽑음. 카페는 범행 장소 정보로 그 자체가 카페에 대한 혐오나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차별적 표현이 될 수는 없음. 하지만, TV조선의 경우 '강화도 카페서'라는 제목으로 불필요하게 지역명을 붙여 강화도라는 지역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는 차별적 표현임

※ 사건사고가 일어난 장소 정보로서 기사 본문에서는 지역이 언급될 수 있음. 하지만, 불필요하게 제목에 지역명(지역주민)을 붙이거나, 본문에서 과도하게 지역 전체 문제처럼 일반화하는 경우를 위반이라고 판단할 필요

3. 모니터링 진행 과정

4. 시험 모니터링과 주요 논의 과정

- **세부 항목 평가에 대한 부분**

1) 세부 항목은 기사 주제나 보도대상을 중심으로 해당할 경우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시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토의를 하면서, 기본문항 10개 중 위반이 있을 경우는 해당 세부 항목을 추가로 할 필요.

예를 들어, "여배우 저격한 홍준표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 어디 갔나"는 주제로 보면 성평등에 대한 보도는 아님. 하지만 '1번 문항 '성별'관련 위반일 경우, 세부항목 중 성평등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2) "강화도 카페서 남편 성기 자른 50대 여성 '살인미수 혐의' 긴급체포" 보도의 경우, 범죄 보도이기 때문에 '범죄성폭력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추가로 진행되어야 했지만, 대부분 세부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음

※범죄·성폭력 보도의 경우, 범죄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나 재판 관련, 성폭력은 수사나 재판 중인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의혹 제기나 고소고발을 포함. 범죄와 사건사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경기 용인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 식당으로 돌진…6명 중경상" "김치도 못 먹던 미국인 아내, 아이들 데리고 갑자기 출국… "이혼 가능?"과 같은 보도는 사건사고이지 범죄는 아니며, 성폭력 관련 보도도 아님. 따라서 사건사고 보도를 범죄·성폭력 보도로 분류해 추가 모니터링 진행해서는 안됨.

※토의한 내용이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및 탄핵 관련 보도는 원칙적으로는 범죄보도지만 우리 모니터링에서는 '범죄·성폭력'보도로 분류하지 않기로 함. 가령 예를 들어 일반적인 범죄보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음. 그런데, 정치인의 비리나 내란죄, 탄핵심판 관련한 범죄의 경우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를 국민모두, 국회, 선관위 등으로 보고 해당 모니터링 기준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3. 모니터링 진행 과정

4.시험 모니터링과 주요 논의 과정

- ✓ **특정 표현에 대한 문제**
- ✓ '성기' '중요부위'와 같은 표현이 자극적, 저속한 표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하지만 해당 표현 자체는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표현일 뿐이며, 범행 사실을 구성하는 정보로 해당 표현 자체가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은 아님.
- ✓ **10번 문항의 문제** – 해당 문항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한 측면이 있어,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대해 문항을 수정
- ✓ SNS를 비롯한 온라인 게시물, 직접 발언 등 누군가가 혐오· 모욕· 멸시· 위협· 차별·막말·욕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제목에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나, 본문에서도 한두 마디가 아닌 여러 문장으로 그대로 옮겨 싣는 경우 10번 문항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
- ✓ 제목에 'X족보' 'X수작'처럼 멸시·혐오·막말 등의 발언을 옮긴 경우 10번 문항 위반으로 판단한 결과들도 있었지만, '개족보' '개수작'을 직접 옮기지는 않고 일부 가림 처리(X로 표기)했으므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기로 함.

기존 문항	수정 문항
10.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이 자극적이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10. 누군가의 혐오· 모욕· 멸시· 위협· 차별·막말·욕설 등의 발언을 불필요하게 강조하거나 자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4. 주요 분석 결과

언론사(80곳)	일자 및 담당 모니터원
경향신문, 동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YTN, 채널A, JTBC, 한국경제TV, MBC, SBS, 뉴시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비즈워치,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미디어오늘, 아이뉴스24,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디지털타임스, 지디넷코리아, 더스쿠프, 레이디경향, 매경이코노미, 시사IN, 한겨레21, 한경비즈니스, 중앙SUNDAY, 기자협회보, 농민신문, 동아사이언스, 강원일보, 대전일보, CJB청주방송, 경기일보, 매일신문, JIBS (40개 매체)	1월 6일(월): 최세희 2월 11일(화): 이은미 3월 19일(수): 이한빛 4월 24일(목): 윤소정 5월 30일(금): 전현정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연합뉴스TV, TV조선, MBN, SBS Biz, KBS, 뉴스1,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조선비즈, 조세일보, 한국경제, 노컷뉴스, 더팩트, 데일리안, 머니S, 디지털데일리, 블로터, 전자신문, 시사저널, 신동아, 월간 산, 이코노미스트, 주간경향, 주간동아, 주간조선, 여성신문, 코메디닷컴, 헬스조선, 강원도민일보, 대구MBC, 전주MBC, 국제신문, 부산일보, kbc광주방송 (40개 매체)	1월 6일(월): 김예연 2월 11일(화): 강유정 3월 19일(수): 김서영 4월 24일(목): 하지수 5월 30일(금): 양지우

4. 주요 분석 결과

1. 보도 일반의 인권 지표 준수 현황

- 2,000건의 보도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10점 기준 평균 9.9점(1=준수/ 0=미준수)
- 항목별로는 성평등 관련 평균점수가 0.97점으로 가장 낮음. 그 외 출신, 장애 등 0.99점으로 미준수가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남

N=2,000

성평등	연령	출신	장애등	학력등	직업등	지역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자극적보도	종합
0.97	1.00 (0.997)	0.99	0.99	1.00 (0.998)	1.00 (0.996)	1.00 (0.988)	1.00 (0.997)	1.00 (0.99)	1.00 (0.988)	9.9

4. 주요 분석 결과

2. 항목별 미준수 사례

1)성별에 따른 차별·혐오 보도 유형 및 사례

✓불필요한 성별 표기
✓혐오 또는 비하 표현(OO남, OO녀 등)
✓성역할에 대한 편견(~엄마, ~딸, ~아들 등)
✓외모나 신체적 특징 부각(미모, 몸매, 특정 신체 부위 강조 등)

기사 제목	미준수 이유
'55세' 제니퍼 애니스톤, 탄탄한 몸매 비결… 매일 아침 '이것' 마신다?	건강 비결을 위한 배우의 생활 습관을 탄탄한 몸매 비결이라며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강조
"자기야, 공소시효 끝났어" 불륜녀 남편 살해→19년 도피…착각 속 '체포'[뉴스속오늘]	A씨는 그 동네에서 미인으로 유명했다는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여성 외모를 강조한 불필요한 표현', '단골손님과 주인으로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은'이라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사적인 사항임.
"집밥 그리웠다는 기러기 남편, 딴 살림 차리고는 이혼하자네요"	집밥 그리웠다는', '자유롭고 싶다'는 표현은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이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너무 잘생겼네" 난리난 붕어빵 사장, 노점 신고 당하더니…근황 '반전'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이 외모를 부각하는 표현
할머니 "우리 애 어딨냐" 女교사 "없어요, 몰라요"…초등생 피살	남교사'라고 하지 않듯이 '여교사'라는 성별의 부각은 차별의 소지가 있음.
"누구든 같이 죽으려고 했다"…초등생 살해 여교사 본격 수사	여교사라는 성별의 부각은 차별의 소지가 있음. 우울증 증상에 대한 다수의 언급은 우울증 자체에 대한 혐오 인을 심화할 수 있음

4. 주요 분석 결과

2. 항목별 미준수 사례

1) 성별에 따른 차별·혐오 보도 유형 및 사례

74세 할머니 남편은 40세..."다른 부부보다 성생활도 활발" 34세 나이 극복 비결은?	74세 할머니라는 표현은 불필요하게 성별과 연령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다.
"근무 안 하는 우리 딸, 인건비는 줘야지"…보조금 500억 줄줄 샜다	본문 내용에서는 가족 간 거래나 인건비 부정 지급 등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제목에서는 근무 안 하는 딸, 인건비는 줘야지에서 딸을 강조해 딸들이 대부분 무능력함에도 월급은 받는다는 뉘앙스로 느껴질 수 있음
"자유가 좋았는데"…50대가 된 딩크족 공무원女의 후회	공무원 녀 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임
"아들아, 왜 그물을 메고 다니냐"…올 여름, 남자들 '핫템'으로 뜨는 이것	특정 패션에 대한 남성들의 선호를 '아들'이라는 성역할로 부적절하게 보도함
"엉덩이 큰 女, 장점은 바로 접근"..女 51명 '번따'했다는 대학생 노트 '경악'	내용 중 단 1명의 사례에 대한 메모만 있을 뿐인데, 제목에서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강조하며, 불필요하게 자극적으로 보도함
아파트 흡연男 "담배 냄새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으세요"…역대급 적반하장 글 '황당'	흡연 男'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성별에 따른 차별적 표현을 사용함
"AI 로봇 아냐?"…비현실적 여대생 미모에 '발칵' 뒤집힌 중국	여대생이라는 불필요한 성별 강조와 외모를 대상화
"남편 연금 때문에 아내까지?" 건보료에 억울한 11만 명	소득여부에 따른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관련 제도 변경을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이 제목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함
"납작가슴이 배신했다"…420만 팔로어 얻은 '제로컵녀' 돌연 가슴 확대수술	"납작가슴", "제로컵녀" 등 특정 성을 조롱하고 신체를 강조하여 성적대상화
"이러면 피자 무조건 또 먹는다" 대치동 엄마들 감탄했다…'메뉴판' 이렇게 써야	대치동 엄마, 대치맘 등 특정지역 주민, 그리고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함

4. 주요 분석 결과

2. 항목별 미준수 사례

2) 연령에 따른 차별·혐오 보도 유형 및 사례

✓특정 연령층에 대한 혐오·차별

✓특정 연령층 남성과 여성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비하 또는 희화화

기사 제목	미준수 이유
"아재옷 아니었어?"…2030, 미친듯 쓸어담자 없어서 못산다	기사 제목에 '아재'를 사용한 것은 중장년층 남성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므로 2번 기준 미준수다.
74세 할머니 남편은 40세..."다른 부부보다 성생활도 활발" 34세 나이 극복 비결은?	74세 할머니라는 표현은 불필요하게 성별과 연령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다.
"60대 옆집 남녀, 새벽에 문열고 '찐한 39금' 소음"… 어떡하죠?	60대 옆집 남녀는 마치 성생활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연령에 따른 편견을 조장함
'살 날 긴데…' 돈 안 쓰는 50~60대 소비하락 주도	돈 안쓰는 50-60대'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마치 소비하락의 원인이 50-60대에게만 있다고 나이에 대한 모욕, 비하 발언이 담겼다고 판단
"매일 잠자기 전에 폰 들고 뭐하는거야"...50대들이 더 난리 '앱테크 광풍'	제목에서. '50대들이 더 난리' 는 표현은 특정 연령대의 앱테크 열풍에 대한 멸시적 표현이라고 판단. 더 적극적이라는 표현등을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 판단

4. 주요 분석 결과

2. 항목별 미준수 사례

3) 출신 지역·인종·국가에 따른 차별·혐오 보도 사례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는 국적 표기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비하

기사 제목	미준수 이유
"대치동 엄마들 이수지에 긁혔다"…'이 패딩' 이젠 못 입겠다 난리	대치동 엄마' , '긁혔다' 는 지역을 이유로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비하 표현에 해당됨.
양수 터졌는데 병원 40여곳서 '진료 불가'…20대 임신부, 구급차 출산	기사 내용 중 '베트남 국적의 임신부'라 언급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는 출신국가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다.
아버지와 결혼 후 도망간 베트남女…"유산 17억 갖는다?" 자식들 분통	제목에 아버지와 결혼 후 도망간 베트남 여성이라는 표현은 해당 지역 출신 이주민, 외국인들 모두가 마치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표현임
父와 혼인신고 후 달아난 베트남女…"17억 유산 남겼는데 저희 남매 어쩌죠?"	제목에 새어머니가 아닌 베트남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 또는 이민자들이 모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표현임. 또한 외국인이 아닌 우리나라 국적의 새어머니였다면 앞에 국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성으로만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음.
"한국 꼴찌 만들자"…콜드플레이 팔찌 회수율 1위에 중국인이 한 행동 '못매'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이 일부 중국인 누리꾼의 행동을 중국인에 대한 혐오로 보도
집 보러 갔더니 "니하오"…외국인 집주인 10만 시대, 절반이 중국인	외국인 주택 보유 중 중국인이 보유한 비율이 50%를 넘고, 토지는 미국인이 보유한 비율이 50%를 넘는데, 사안의 본질과 상관없이 '니하오'라는 표현을 사용해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함

4. 주요 분석 결과

2. 항목별 미준수 사례

4) 장애·종교·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혐오 보도 유형 및 사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표현

✓범죄에서 특정 질병이 원인인 것처럼 다룸으로써 특정 정신질환을 가진 집단에 편견과 혐오를 조장

기사제목	미준수 이유
남녀 생식기 모두 가졌다…첫째에겐 엄마, 둘째에겐 아빠	또래 여자아이와 다른 취향과 성향을 보였다 ' 라며 ' 충격을 주고 있다 ' 는 표현은 간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함.
"난 남자였다"…中 전설적 트젠 무용수, 잇단 공연 취소 왜?	"난 남자였다"는 표현은 당사자가 했던 말도 아니며, 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적 표현임.
초등생 부친 "아무 죄 없는 아이를… 하늘이는 별이 됐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의 학교 복직이나, 초등학생 저학년 교사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발언의 다수 등장은 질병이 살해의 원인으로 비춰서 혐오를 조장함.
"범행 나흘 전 동료 교사에 헤드록 걸어…'내가 왜 불행해야 하냐'고 말해"	우울증에 대한 지나친 부각은 같은 증상을 해당 증상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음.
대전 초교서 교사가 8살 여아 흉기로 살해…범행 후 자해 시도(종합2보)	우울증을 앓는 환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복직했다는 사실은 복직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우울증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해당 증상을 가진 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
상대 선수 사타구니를 '쑥'…발칵 뒤집힌 여자 축구계	선수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불필요하게 밝히며 보도 대상에 대한 혐오를 조장함.

4. 주요 분석 결과

2. 항목별 미준수 사례

5) 학력·재력 등에 따른 혐오·차별 보도 유형 및 사례

✓지불 능력(금액)에 따른 혐오·차별 표현

✓특정 지역 주택(시세)을 토대로 혐오·차별

✓사안과 무관하게 증여 액수를 바탕으로 혼외자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

기사 제목	미준수 이유
"韓 호갱님 맞네"…日선 5명이 2만원 내는 유튜브, 韓서는 6만원	호갱님'은 소득, 재력 등을 이유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비하하는 표현에 해당됨.
"계엄 겪고도 어떻게 국힘을" "이재명 주변 믿음 안 가" 갈리는 민심	"봉천동 25평 아파트 산다"를 청렴결백하다고 표현. 소득과 재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유발할 수 있음.
정우성 유산은? …혼외자에 10억 주고 사망한 회장 사례 보니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혼외자에 10억 주고 사망한 회장 사례를 들어 소득.재력 등을 이유로 혼외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함
"강남 집부자들은 역시 한발 빨랐다"…작년 말 증여 몰렸다는데, 이유가	강남 집부자' '호화 주택'은 재력 등을 이유로 집단에 멸시적 표현을 사용한 사례다.

4. 주요 분석 결과

2. 항목별 미준수 사례

6)직업·고용형태 등에 따른 혐오·차별 보도 유형 및 사례

✓직급을 관용적으로 사용하여 혐오·차별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관용적 표현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 조장

✓고용형태(계약직)에 대한 혐오·차별

기사 제목	미준수 이유
첫 차' 고민하는 김 대리…카드 vs 캐피털 뭐가 유리할까?	보도 목적과 무관한 '김대리'를 기사 제목에 쓴 것은, '30대 직장인'으로 대체 가능했던 만큼 차별적 표현에 해당한다.
전처 조카와 살림 차리더니…유명 축구선수 '세기의 막장' 썼다	막장'이라는 말은 탄광 노동자가 일하는 마지막 갱도를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됨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소변 치우는 사람?"…요양보호사 구인 '별따기' [취재후]	요양보호사를 '대소변 치우는 사람'이란 말만 강조하여 제목에 붙인 것은 해당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이다. /10. 해당 비하 발언은 한 유튜버로부터 나온 말인데 그것을 제목에 그대로 인용했다
'대리투표' 혐의 사전투표 선거사무원 체포…"남편 신분증 사용"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라며 불필요한 계약직을 강조.

4. 주요 분석 결과

2. 항목별 미준수 사례

7)지역(민)에 대한 혐오·차별 보도 유형 및 사례

- ✓불필요하게 지역명을 언급
- ✓사안과 무관하게 지역에 대한 편견 조장
- ✓사건명에 지역을 붙이는 보도 관행
- ✓특정 지역민에 대한 편견

기사 제목	미준수 이유
말 그대로 '설상가상'…위기의 제주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한 것을 제목에서 제주지역만의 위기로 부정적 이미지만을 강조함
“비싼 제주?” 내국인 발길 뜸한 비수기.. 호텔가는 ‘가격 인하’로 돌파구 찾는다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이유가 비싼 가격때문이 아님에도 제목에서 '비싼 제주'라는 표현으로 지역적 편견을 부추김
단독] 대전 초교서 1학년 초등생 흉기에 사망…40대 여교사 범행 자백	학교는 범행 장소라 언급이 불가피 하나, 지역명의 타이틀 부각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을 심화할 수 있음.
경북 구미 스토킹 신고에 보복 살인' 서동하, 무기징역 선고	경북 구미 스토킹 신고에 보복 살인' 이라는 타이틀은 어법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부산 돌려차기는 특정 사건명에 지역명을 붙여 지역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음
"이러면 피자 무조건 또 먹는다" 대치동 엄마들 감탄했다…'메뉴판' 이렇게 써야	대치동 엄마, 대치맘 등 특정지역 주민, 그리고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함

4. 주요 분석 결과

2. 항목별 미준수 사례

8)명예훼손성 보도 유형 및 사례

- ✓보도 대상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보도
- ✓보도 사안과 무관한 연예인 이름을 언급해 부정적 이미지 조장
- ✓보도와 사안과 무관한 연예인 관련 사안과 사진을 실어 오인을 주는 보도

기사 제목	미준수 이유
"어머님, 방 빼세요"...박지윤 '시부모 거주 아파트' 처분했다	"어머님, 방 빼세요"라는 말은 보도 대상이 한 말이 아님에도 악의적으로 곡해될 여지가 있는 제목으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위험이 있음
유재석 믿고 샀는데…‘판매량 1위 비타민’ 회수 조치	문제의 비타민은 요오드 과잉 함유된 내용이고 유재석과는 관련이 없는데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음
"박나래 마시는 걸로" 720만원 와인 주문하더니…끝내 '이것' 나왔다	연예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에 대한 기사에서 사안과 관계없는 연예인 박나래가 와인을 들고 있는 사진을 크게 실어 마치 실제인것처럼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음

4. 주요 분석 결과

2. 항목별 미준수 사례

9)사생활 침해성 보도 유형과 사례

✓사안과 무관한 인물의 지극히 사적인 옷차림 부각
✓사안과 무관한 개인의 외모나 인간 관계
✓사안과 무관한 인물의 장래희망이나 병력

기사 제목	미준수 이유
비키니 임세령, 이정재가 '찰칵'…美 매체가 담은 11년 로맨스	비키니 입은 ~'이란 정보는 기사의 본질인 데이트 포착과 관련없는 사적인 사항임.
"자기야, 공소시효 끝났어" 불륜녀 남편 살해→19년 도피…착각 속 '체포' [뉴스속오늘]	A씨는 그 동네에서 미인으로 유명했다는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여성 외모를 강조한 불필요한 표현', '단골손님과 주인으로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은'이라는 정보는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사적인 사항임.
비키니 입은 임세령, 사진 찍어주는 이정재..해변 데이트 깜짝 포착	비키니 입은 ~'이란 정보는 기사의 본질인 데이트 포착과 관련없는 사적인 사항임.
"7살 때 내복을 12살 죽는 날에도"...감옥서 아이 낳은 계모 [그해 오늘]	계모가 감옥에서 아이를 낳은 사안은 사망한 자녀에 대한 학대와는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지극히 사적인 사안임.
이혼 후 알게된 충격 사실…"내 아이 아니었다" 男 분통	발기부전은 사건의 본질과 관계 없는 지극히 사적인 사안임.
"이래도 연인 관계 아냐?"…고2 김새론이 김수현에 보낸 문자 공개	김새론의 두 동생들이 연기를 꿈꿨고, 한 명은 포기했다는 얘기는 사적인 사항이다.

4. 주요 분석 결과

2. 항목별 미준수 사례

10) 차별·혐오 발언의 여과없는 인용 보도 유형과 사례

✓차별·혐오 표현을 제목에 그대로 인용
✓지나칠 정도로 막말과 혐오표현을 기사 본문에 그대로 실음
✓SNS상 차별·혐오 표현을 캡처해 사진으로 게재
✓기사 핵심 내용과 무관하게 연예인을 언급

기사 제목	미준수 이유
전 부인 조카와 결혼한 축구스타…"이런 괴물들" 여동생 분노	기사 제목에서 "이런 괴물들"이라는 막말을 그대로 인용
"시위하는 개XX들 총으로 쏴 죽이고파"…한남동 국밥집 사장 글 '뭇매'	비속어를 '개xx들'로 처리한 기사의 제목·본문과 달리, 기사에 첨부된 사진에서는 욕설이 편집 없이 그대로 드러나 10번 기준을 미준수하였다. 누리꾼들은 "○○국밥에 가면 총 맞아서 죽을 수 있다. 목숨 지키기 위해 절대 가지 맙시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총 맞아 죽어도 모를 맛", "총 맞아 뒈질 각오 하고 먹어야 하는 곳", "시위 참여 경력이 있어서 가면 총 맞을까 봐 무서워서 못 가겠다", "하마터면 국밥 먹다가 총 맞아 죽을 뻔", "여기가 국밥 팔아주신 분들 쏴 죽이고 싶다는 그곳이구나. 그럼 팔질 말던가? 이중성 오진다", "이 사달을 벌인 대통령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추위에 나가는 시민들한테 욕하는 집", "총부리를 잘못 겨눴다. 시위하게 만든 사람한테 겨눠야지", "자기 신상 혹은 운영하는 식당 이름 걸고 이런 글 쓰는 건 얼마나 멍청해야 가능한 걸까? 물론 보고 거를 수 있도록 멍청해주셔서 감사하다", "불매해달라고 자진 신고하네" 등 조롱 글을 남겼다.
"이대생 딸, 노래방 도우미"…강성범, 민주당 유튜브 고정출연 논란	제목의 이대생 딸 노래방 도우미는 특정 여성에 대한 편견을 담은 표현이며, '과거 논란 되었던 발언을 타이틀로 강조하여 자극적으로 기사를 작성함.
의식수준이…민주당, 2030 청년에 "고립시켜야" "쓰레기들" 발언 파문	특정집단에 대한 '쓰레기'라는 혐오 발언을 여과없이 제목에 직접 인용한것은 부적절함
아이유·유재석·뉴진스·한강 등 107명…'빨갱이 명단' 논란	하단에 첨부된 SNS 캡쳐본에 나타난 악플의 수위가 도를 넘었으나 이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함

5. 결론을 대신해

- **일부의 분석결과(세부 분석은 진행 중)의 시사점**
  - ✓2천 건의 보도에 대한 지수(index-해당 유무에 따른 합산 점수) 상으로는 10점 중 9.9점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 수치가 높다 혹은 낮다는 것을 가늠해 볼 기준이 부재함.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비교가 필요함
  - ✓대상 기간 설정(1월 ~ 5월)의 불가피성이 있음. 이 기간은 불법계엄, 탄핵, 대선 등 일상적 상황이 아니기에, 해당 보도들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 한계가 있음
  - ✓상대적으로 가장 미준수가 많은 성평등 사례에서는 불필요한 성별 표기, 성별 역할, 성적 대상화 등이 관행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사건이나 범죄보도에서 사건명에 지역을 붙이는 관행적 보도가 이어짐. 이 부분에 대한 성찰과 개선이 필요함

5. 결론을 대신해

- **지역(민)에 대한 차별·혐오 보도 관행의 문제**
- 모니터링 대상 2천 건의 보도(1월 ~ 5월) 중 계엄과 탄핵관련 보도 462건을 제외한 1,538건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재분석 결과, 성별 관련 위반건수가 가장 많고(64건, 4.2%), 두번째로 많은 위반은 지역(민)에 대한 차별 혐오 보도(24건, 1.6%)로 나타남.
- 네이버 랭킹 뉴스 속성상 언론사가 포털에 노출을 극대화하려는 뉴스이면서 가장 많이 클릭한 뉴스 상위 5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민) 관련 보도가 두번째로 높은 위반 빈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언론의 성찰과 개선이 필요함
- 특히 매체별로(매체 분류는 네이버의 분류에 따름) 미준수 24건 중 방송통신이 7건(29.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역매체(5건, 20.8%)가 많았음.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지역매체가 지역(민)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을 더 많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성찰할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

5. 결론을 대신해

- **인권지수의 성과 및 한계, 향후 방향**
  - ✓지수 특성상 준수/위반 여부만 판단할 뿐, 그 정도는 알 수 없음
  - ✓첫 시도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지속적인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지표문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보다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표 문항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일정정도 수준의 모니터링 능력이 필요하며, 이 같은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시민사회단체의 고민

감사합니다!!!

발제 2

기후 재난 현장에서 묻는 '사람의 안부':

인권으로 고찰하는 제주 폭염의 기록

이 정 원
(사)한국언론학회 이사

기후 재난 현장에서 묻는 ‘사람의 안부’
: 인권으로 고찰하는 제주 폭염의 기록

이정원
(사)한국언론학회 이사

1. 들어가는 말

올해 여름은 ‘뜨거웠다.’ 좀 부족하다. 더 센 표현이 필요하겠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으로 뜨거웠다.” 이는 틀린 것 같다. 올해가 끝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가 역대급의 정점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다. 해가 갈수록 폭염에 폭염이 더해지고, 역대급에 역대급이 더해질 것이다. 벌써 걱정이다. 역대급의 수위는 어디까지 오를까. 에어컨의 냉방은 몇 도까지 내려야 할까.

어쨌든 지금까지 나타난 통계는 올해가 역대급으로 더웠음을 증언하고 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0월 제주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3.2℃ 높은 21.9℃로 역대 최고 1위를 기록했다. 제주 지점은 관측 이래 10월 열대야(10.6.)가 처음 나타났고, 서귀포 지점은 관측 이래 10월 열대야가 두 번째 나타났다. 두 지점 모두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를 기록했다(제주지방기상청, 2025).

통계는 사람의 고통을 말하지 않는다. 수치에 가려지거나 파묻혀 보이지 않은 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었을까. 구체적인 규모를 산정하지 않아도 올해 폭염의 계절을 건넌 사람들이라면 감각적으로 타인이 겪었을 고통의 무게를 충분히 알고 공감한다.

왜냐하면 폭염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쏟아졌기 때문이다. 대응 방법이 각자가 달랐을 뿐, 태양은 한낮 거리와, 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균일한 강도의 폭염을 전했다. 폭염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만큼은 양극화와 계층 구분이 소용이 없었다. 폭염은 평등한 성질을 갖는다.

하지만 대응 방법에 따라 고통은 불평등하게 전해진다. 생활과 업무 공간 형태에 따라, 에어컨 유무와 가동 시간 차이에 따라 고통의 크기는 다르게 산정됐다. 누군가는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으로 폭염의 위험을 피해 안전을 지켰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야외에

서 폭염을 맞으며 노동을 한 누군가는 위험을 감내해야 했다.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고 에어컨을 설치하다 사망한 20대 청년 노동자의 소식[1]에서 폭염이 초래한 양극화의 비극, 모순을 목격한다(kbc광주방송, 2025).

폭염은 탄소 사회가 만든 대표적인 자연 재난이자 사회적 재난이다. 앞으로 매년 역대급으로 찾아올 폭염을 '무더위'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소비할 수 있는 여유와 낭만은 사실상 사라졌다. 자본주의의 생산/축적 논리가 생태적 한계와 부딪혀 발전과 번영의 이념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세계, '파국의 시대'까지 예고된 상황이지만(Stengers, 2009), 놀랍게도 제주 지역 공론장은 폭염이 드리우는 파국의 징후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전과 유사한 형식, 통계 자료에 의존하는 보도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폭염을 포함한 '기후 위기'는 통계 자료 이전에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감수성'의 의제이다. 기후라는 말 속의 '후'(候)는 단지 대기의 상태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람의 안부를 묻는 행위, 생명의 상태를 살피는 뜻이기도 하다. '기체후일향만강(氣體候一向萬康)'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를 기록하고 공론장에서 폭염 등의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것은 곧 인간 생명의 안부를 묻고 걱정하고 기록하는 행위인 것이다(김소영, 2025).

질문은 제주 사람들 생명의 안부를 묻고 걱정하고 기록하는 제주학과 언론학, 언론 현장 종사자들에게 향한다. '어떠한' 감수성으로 폭염의 위세와, 그 속을 버티며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록할 것인가?

결국 '인권 감수성'일 수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 '건강 및 안전권'의 감수성이 제주학과 언론학의 공론장에서 활발히 형성, 확산되고 교류·융합돼야 한다. 정치적 실천 전략으로서 제주학과 언론은 건강과 안전권의 관점으로 폭염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 사람들의 안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살핀다'는 것은 단지 사물을 보는 행위가 아니다. 위험의 조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동체의 안녕을 예비적으로 관리하는 태도다. 이 태도가 결여되면 위험은 제도적으로 포착되지 못한 채 반복되고, 고통은 사회적으로 호명되지 못한 채 방치된다(이재복, 2025).

폭염이 만드는 위험과 파국의 시그널, 사람들의 고통을 제주학과 언론은 '살피는 행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알려야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고통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그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윤리적 책임은 정치적 영역에만 속하지 않는다. 지역 사람들의 삶에 애정을 갖고 끊임없이 취재, 기록하는 제주학과 언론에게도 해당되는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할 때 학문과 산업은 시민들로부터 믿

1) 2024년 8월,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선풍기 2대뿐인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 고 양준혁 씨가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지만, 1시간을 방치된 끝에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 13일, 노동청은 10개월간 수사 끝에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을 일으켰다(kbc광주방송, 2025).

음과 권위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본 발표문은 인권, 구체적으로 건강과 안전권의 관점으로 제주학아카이브에 수록된 연구 기록물과 2025년 제주 지역 언론이 보도한 폭염 보도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인권 감수성이 부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진단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관점과 실천 방안의 하나로 '기후 건강 리터러시(climate health literacy) 제고'를 제안하려 한다.

2. 폭염을 둘러싼 이론적·정책적 논의들

1) 건강 및 안전권

폭염을 건강과 안전권의 관점으로 하여 공론장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기후 위기로 제주 사회도 '위험사회'에 이미 편입됐기 때문이다. 위험은 위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처리하고 인지하고 상징화하고 거기 대비하는 인식과 실천의 짜임을 가리킨다(김홍중, 2023). 이에 위험사회는 '위험한(dangerous)' 사회가 아니라, 리스크(risk)를 중심으로 정치, 소통, 정책이 이뤄지는 후기 근대 사회인 것이다(Beck, 1994).

법적 관점에서 리스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리적 위해인 위험과 개념이 다르다. 위험은 법익 침해 발생의 개연성과 관련이 있는 반면 리스크는 법익 침해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다. 리스크는 발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발생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예측'이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는 발생 가능성을 제로(O)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의 허용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이부하, 2019).

세월호와 코로나 팬데믹, 이태원 참사 등을 거치며 한국사회 시민들은 한국형 자유 민주주의 모형의 최우선 가치를 '건강과 안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유 가치를 구현하고 있지만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국가 주도의 제도적 통제를 받는 것도 수용하는 역설적 행동 양식을 보인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뤄진 정부 주도의 '거리 두기' 등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다.

예측되는 리스크가 클수록 시민 생명과 안전 권리 보장 요구는 더 커지고 구체화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적·정치적 시스템을 통해 더 광범위하게 확산, 전파되기에 권력 기관과 전문가 집단이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즉, 위험사회에 편입한 제주사회는 폭염으로 발생할 시민의 생명·건강 리스크의 허용

범위를 결정해야 하는 정치적·정책적·학문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제주학과 언론학, 언론사는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공유할 수 있는 공론장을 조성한 뒤 시민들을 공론장에 참여시켜야 한다. 그 후 지자체와 소통, 협력하며 정치력을 규합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정치적·정책적·학문적 책임을 실천으로 이행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이 '건강과 안전권'이 된다. 건강과 안전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기초적인 기본권이다.

불안전, 개인적·사회적 폭력, 재난 등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과 안전권을 절실히 요구하게 된다. 이에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는 기본권의 주관화로 이어진다. 객관적인 보호 의무의 주관화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의해 인정된다.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성 조항은 국가에게 인간의 존엄성 보호라는 주관적 권리를 내포하고 있다(표명환, 2002).

그렇기에 자연 재난과 사회·경제적 위험인 사회재난으로부터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더할 나위가 없다. 반면 건강과 안전권을 무리하게 강요할 경우 시민의 건강, 안전 확보 및 유지를 명분으로 국가가 시민의 일상 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해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이부하, 2019).

그럼에도 한국사회의 공론장은 갈수록 건강과 안전권을 더 명확히, 세밀하게,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 강력하게 보장하는 흐름으로 조성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이유는 간략히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민 건강, 안전권 실현에 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 및 정치력 행사에 있다. 둘째, 죽음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초래한 대형 참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후 변화에 의한 자연 재난의 리스크 범위가 더 크고 넓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에 속하는 '폭염'도 마찬가지다. 유독 더웠던 올해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다 명확히 보장하기 위한 공론장이 형성됐다. 이는 폭염의 재난을 개인이 온전히 감당하고 해결하는 '불가항력적'인 것, '숙명적 과제'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변화한 것이다. 우선 폭염을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재난으로 인식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어 폭염 원인을 사회적인 것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해결책 또한 국가와 사회가 돼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건설노동자, 플랫폼노동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농수축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영역의 노동자들이 혹서기에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옥외 노동자들의 휴게권 · 위생권 보장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불요불급한 일이 아닐 경우, 혹한 · 혹서기에 노동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25).

이를 반영한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35도 이상인 경우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 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용노동부, 2025).

정부의 잇따른 요구와 정책적 조치는 개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통제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이를 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규칙 개정에 대해 "2024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사업주 보건 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폭염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인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5).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공론장에서 반발이 없는 것은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폭염을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직접적인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권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할 공동의 권리로 합의하고 있어서다.

2) 기후 건강 리터러시

미디어는 사회적으로 재난 문제를 정의하고 위험에 대한 경고와 정보를 제공하며 재난 발생 시 적절한 행동 요령을 전달하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매개체로 간주한다. 특히 지역 미디어는 지역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로서 기능해야 하기에, 재난 정보와 해석, 행동 요령, 사후 예방 대책 등을 지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재가공, 제공해야 한다(정용복, 2024).

지역 미디어는 지역 언론사만 국한하지 않을 것이다. 폭염 등의 기후 재난 정보와 그로부터 도출되는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지역 주민에게 연결하는 책임은 지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한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인의 삶과 애환을 공유하고 도민과 함께 성장하며,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플랫폼' 실현의 비전을 갖고 있다(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

2025). 그 '플랫폼'은 도민의 삶과 밀접히 관계를 맺으며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내야 본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주학연구센터가 구축하는 플랫폼은 도민들의 안부를 끊임없이 묻고 기록하고 건강 ·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공하는 지역 미디어가 돼야 한다.

관건은 지역 미디어가 만드는 콘텐츠의 수준과 내용이다. 지역민 입장에 서서 지역민들이 일상에서 용이하게 수용하고 해석,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면서 동시에 전문성을 담보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느냐다.

특히 기후 재난은 다양하고 다층적인 분야와 전문 지식, 정치적 관점이 동시다발적으로 얽혀 있다. 이에 미디어는 지역민들이 기후 재난 문제를 비교적 쉽게 이해하는 가운데 해결을 위한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문해력(文解力)을 갖고 재난의 문제를 분석 및 해석해야 한다.

이에 기후변화의 복잡한 양상과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결과를 이해하고, 기후변화에 적응 및 대응하기 위한 리터러시(literac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리터러시는 국내에서 주로 문해력으로 번역(文解力) 된다. 리터러시는 읽고 쓰는 기초적인 능력 외에도 구술 능력과 산술 능력,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포함한다.

UNESCO는 리터러시를 다양한 맥락과 관련된 자료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창출하고, 의사소통하고, 산출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리터러시가 개인이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더 큰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고 설명한다(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05; 김혜윤 · 최슬기 · 채수미, 2023).

기후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위협과 피해를 안긴다. 이에 보편적인 건강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해 기후 재난으로부터 나타나는 건강 문제에 대비하고 건강적응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 및 안전 정보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식을 갖추고 행동해야 하는지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이론적·정책적 조건으로 최근 '기후건강 리터러시(climate health literacy)'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건강 리터러시는 기후 리터러시와 헬스 리터러시가 통합된 개념으로 정리된다(최슬기, 2023).

기후 건강 리터러시는 인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가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방향의 이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기후 관련 정보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기후변화에 대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며,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과 관련하여 정보와 근거에 기반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일컫는다(Yum, Kim, Jung, & Jung, 2021). 국내에서는 기후 완화 및 적응을 위해 필수적인 역량으로 여겨진다(Chae et al., 2022).

요약하면, 기후 건강 리터러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건강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활용하는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기후변화에 대응 및 적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건강 문제와 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건강 정보를 판별하고 활용하는 복합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김혜윤 · 최슬기 · 채수미, 2023).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기후건강 리터러시를 기능적 문해력(functional literacy), 중급 문해력(intermediate literacy), 고급 문해력(advanced literacy)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기능적 문해력은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root cause)과 건강과의 연관성(mechanism)을 이해하는 것이다. 기온과 해수면의 상승 등 기후변화가 발생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특히, 기후변화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대한 이해는 기후와 건강 리터러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Limaye et al., 2020; 김혜윤 · 최슬기 · 채수미, 2023).

중급 문해력(intermediate literacy)은 기본적인 연관성에 대한 이해에서 더 나아가 기후변화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삶의 질의 밀접한 연관성을 규명한다. 기후변화가 건강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determinants), 건강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것(implications),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와 적응을 통해 낮출 수 있다는 것(intervention)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앞의 글).

고급 문해력(advanced literacy)은 보건의료 인력, 연구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수준으로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수의 데이터와 모델을 토대로 이해하고(evidence), 기후변화와 연관된 건강 영향이 시공간을 넘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complexity)을 가리킨다(앞의 글).

국제기구와 많은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인식하고, 기후 건강 리터러시 제고에 기여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성인, 보건의료인,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근거 기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 지원 및 보고서 발간, 웹사이트 운영,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기후 적응을 위한 정책 옹호 등을 실시하고 있다(Chae et al., 2022; 김혜윤 · 최슬기 · 채수미, 2023).

3. ‘제주 폭염’ 기록 고찰

폭염에 대해 제주학과 언론이 어떤 관점, 프레임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제주학아카이브에 수록된 연구 기록물과 2025년 제주 지역 언론이 보도한 폭염 보도를 인권의 관점으로 고찰한다.

1) 제주학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가 관리, 운영하는 〈제주학 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 ‘폭염’으로 통합 검색을 했다. 총 3건이 나오는데, 분야는 순수과학 1건, 역사 2건이다(제주학 아카이브 홈페이지, 2025a). 유형도 사진이 2건이고 기록 건수가 적어 유의미한 고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검색어를 ‘기후변화’로 바꿔 재검색했다. 총 92건이 나왔다.

분야별로는 순수과학이 63건으로 가장 많고, 사회과학 17건, 기술과학 7건, 총류 5건이다(제주학 아카이브, 2025b). 이 중에서 비교적 인권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사회과학과 총류의 기록은 아래와 같다.

분야	영역	제목	저자명	생산연도
총류	보고서	이어도 주변해역의 해양·수산·법적·인문학적 기초연구 결과보고서3	이어도 연구회	2011
총류	논문	2012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토양미생물)	현해남, 좌재호	2012
총류	보고서	2012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보고서(조류)	김완병 외	2012
총류	보고서	2012 한라산국립공원 자연 자원조사 보고서 (양서·파충류)	김영호	2012
총류	보고서	2012 한라산국립공원 자연 자원조사 보고서 (곤충)	정상배, 양경식	2012

분야	영역	제목	저자명	생산연도
사회 과학	논문	재난 ZERO화를 위한 안전문화 정 착방안에 대한 연구	고인종	2016
사회 과학	세미나	세계유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방안	고승한	2012
사회 과학	세미나	사료(史料)로 본 전근대사회 제주의 기상 변화와 대응	전영준	2014
사회 과학	세미나	기상기후 변화의 지역 경제적 효과	임동순	2014
사회 과학	보고서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평화와 번영 을 위한 제주포럼 2013 결과자료집	제주 평화연구원	2013
사회 과학	보고서	한국지리지 제주특별자치도 = (The)geography of Korea Jeju	국토교통부	2013
사회 과학	논문	생태관광지의 환경적 책임 활동이 관광지 이미지와 관광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라산 방문객을 대상으로-	허흔 외	2016
사회 과학	논문	태풍 '나리'로 본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난관리 분석 및 함의	강영훈	2008
사회 과학	논문	기후변화 인식과 관광객의 만족 및 행동의도 간 관계 탐색 - 제주 자연관광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	이민재 외	2014
사회 과학	논문	관광객의 기후변화인식에 따른 관광 위험, 관광만족 및 행동 의도 차이 검증을 통한 제주 관광 경쟁력 제고 방안	이민재 외	2015

분야	영역	제목	저자명	생산연도
사회과학	정기간행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표준화 동향 및 시사점 (정책이슈브리프 254호)	김현철	2016
사회과학	보고서	제주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강진영 김병선	2015
사회과학	세미나	명품도시 제주를 위한 전략 모색	제주연구원	2012
사회과학	정기간행물	핀란드의 환경정책과 문화가 제주에 주는 시사점 (제주발전포럼 제48호)	강진영	2014
사회과학	정기간행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주의 수해방지 방안(제주발전포럼 제39호)	박원배	2011
사회과학	정기간행물	기후변화와 제주의 관광정책 (제주발전포럼 제30호)	제주발전연구원	2009
사회과학	논문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도 관광 분야 적응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영진 외	2011

〈표1〉 제주학아카이브 '기후변화' 결과 중 총류·사회과학 기록물

〈표1〉에서 확인하듯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록물은 대부분 제주 산업 정책 개발을 위한 환경적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다. 관광 정책, 수해 방지 방안, 명품도시 전략 등을 모색한 기록물에서 이런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후변화와 상호 영향 관계에 있는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인권의 관점으로 진단, 탐색한 기록물을 찾아볼 수 없다. 기후변화를 파국의 미래로 규정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동 요령, 정책 모색 등을 시도한 기록물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제주 지역 언론 보도

뉴스빅데이터 사이트 ‘빅카인즈(BigKinds)’에서 제주 지역 일간지를 선택해 본격 더위가 기승을 부린 올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보도된 기사 중 ‘폭염’과 ‘건강’, ‘안전’의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정리했다. 검색 결과, 건강과 안전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기사는 10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략적으로 정리한 주요 기사 제목들은 아래와 같다.

“폭염 취약계층에 관심을”
“야외노동자, 건강할 권리·휴식권 보장”
‘살인 더위’에 쓰러지는 노동자들…9월까지 폭염 계속 ‘어쩌나’
“폭염 속 노동자 휴식 보장해야… 실질 대책 마련하라”
폭염 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기사들은 주로 지자체나 노동조합, 기업들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인용하는 수준을 보인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 건강 및 안전권을 관점으로 자체적으로 취재 보도한 기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 또한 기상청 등이 제공하는 통계 정보로 제한된다. 폭염의 재난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는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

방송 보도도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신문과 인터넷에 비해 보도 건수, 보도량이 적기 때문에 더욱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열대야 일수 기록 갱신, 온열질환자 발생자 수, 폭염 관련 사건 사고 등을 전하는 데 그친다.

폭염을 재난의 관점으로 진단, 보도한 기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사들은 보도 초점이 대부분 사람보다는 ‘감귤’과 ‘수산물’ 등 제주 1차 산업을 지탱하는 상품에 맞춰져 있다. 농수산물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결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대책이 나오기도 했다.[2)]

사람보다 산업과 상품의 안부를 묻는 기록의 경향은 기후변화 관련 기획보도에서도 나타난다. JIBS제주방송이 세 차례에 걸쳐 포털에 보도한 〈기후경제, 제주의 다음 장〉이 대표적이다. 기사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주최한 ‘기후경제 세미나’ 발표 내용을 토대로 구성됐다. 기사는 기후 변화가 제주경제의 구조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농업·관광·에너

2)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레드향 등 감귤류 열과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기후위기 대응 감귤 열과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이 냉해나 태풍 등 일부 자연재해만 보상하고 열과 피해는 '생리장해'로 분류해 보상에서 제외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만감류의 품종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임연희, 2025).

지 산업별로 어떤 균열과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을 진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 기후경제' 설계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김지훈, 2025).

> "기후는 계절이 아니라, 경제다." 제주의 산업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입니다. 온난화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생산·소비·에너지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감귤의 당도, 숙박률, 풍력의 출력량. 이 모두가 하나의 기후 곡선 위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후는 산업을 바꾸고, 산업은 경제의 체질을 바꿉니다(김지훈, 2025).

제주학아카이브와 제주 지역 언론 보도의 기록 모두 폭염을 사람이 아닌 산업과 생산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규정하는 특성을 비교적 많이 보인다. 동시에 기후 변화라는 '뉴노멀'을 새로운 경제 산업, 동력을 창출하는 정치적 기회 구조로 인식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가 아닌, 보편적 건강과 안전권의 관점으로 사람의 안부를 기록할 방법은 무엇인가."이다. 앞서 소개한 JIBS제주방송 기획보도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보도는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 집단과 언론사의 협력, 이를 통해 확보한 전문 자료와 정책적 통찰이 기후 경제에 대한 기자의 '리터러시 역량'을 키웠다고 추측할 수 있다.

'사람의 안부'를 묻는 것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보편적 건강·안전권의 관점으로 담론과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언론사의 협력을 통한 리터러시 역량이 기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사는 누구와 협력하고, 어떻게 리터러시 역량을 키워야 하는가? 제주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기록하는 제주학연구센터와 협력을 주목하는 이유다.

4. 맺음말과 제언: '기후 건강 리터러시' 제고 방안 모색

폭염 재난을 보편적 건강·안전권의 관점으로 기록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기후 건강 리터러시' 제고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건강·안전권은 '인권 감수성'이고 기후 건강 리터러시는 '기후 감수성'이다.

두 감수성을 분리해 안부를 묻고 기록하면 현실적 효과를 창출할 수 없다. 인권 감수성으로만 폭염 재난과 도민의 삶을 기록하면 추상적, 선언적 대책만이 반복될 수 있다. 반면 기후 감수성으로만 기록하면 관료적, 기능적인 대책이 우선해 도민 개인의 내밀한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인권 감수성으로 도민의 실질적 삶의 문제와 요구를 입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문제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발휘돼야 할 것이 기후 감수성이다. '기후 건강 리터러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에 도움되는 기후 재난 정보와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기후 위기를 공동체가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자치적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주 지역 언론이 협력을 통해 기후 건강 리터러시를 제고할 수 있느냐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4가지 실행 단계를 구상했다. 이는 ①현실진단 ②협력 기반 활용 ③의제 설정 및 담론 생산 ④홍보 및 교육이다.

1) 현실진단

건강·안전권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을 기록하고 지속적인 기후 건강 리터러시를 구현하는 것을 도민사회가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이념적·정책 철학적으로는 원활히 합의 가능한 사안이다. 관건은 실천 방안이다. 과제를 실천할 제주 지역 언론사와 제주학 연구센터의 내부 사정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 지역 언론은 갈수록 줄어드는 인력과 재정, 사회적 영향력 등의 중층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렇지만 본연 저널리즘, 윤리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다. 제주 공동 문제 및 쟁점에 대해 공공적 발언과 기록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성과도 매년 나오고 있다. 권력 견제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도민 알권리 충족, 민주주의 회복에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 재난에 대한 보도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기후 정책은 영향을 미치는 스펙트럼이 매우 광대하다. 국제협약, 산업, 에너지, 고용 및 노동, 재해재난 등 다양한 정책이 즐비하다(박상욱, 2025). 또한 도민 일상은 매 순간 기후와 상호 작용한다. 기후 재난을 해소한다는 것은 도민이 누린 편한 삶을 불편함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다. 변화로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하다.

이를 제주 지역 언론 문화와 연계하면 출입처 중심으로 취재, 보도를 하는 기자가 융·복합적 분야와 영역, 도민들의 거부감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기후 재난 문제를 입체적으로 다루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후 재난을 기록하려면 출입처 장벽을 초월해 출입처 간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도민들의 참여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와 지역사회의 협력, 참여가 필수다.

이런 구조적 한계는 제주학연구센터에도 해당한다. 독립 학문 영역 중심으로 연구와 기록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융·복합 연구가 필연적인 기후 재난 문제 연구를 업무

장벽을 허물어 수행할 수 있느냐가 과제가 된다.

하지만 폭염은 해가 갈수록 그 기세가 강해지고 있다. 도민 개인이 입을 물적·심리적 피해 또한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적·정책적 토대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폭염 기록의 관점을 보편적 건강·안전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폭염 등 기후 재난을 해소하기 위한 언론사-기관 간 협력과 실천이 지금부터 하나씩 이뤄져야 한다. 출입처와 업무 장벽을 서서히 허물기 위한 시작 단계로, 제주학연구센터와 언론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2) 협력 기반 활용

제주학연구센터와 도내 언론 기관 및 단체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제도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센터는 2024년 11월 제주언론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5년 6월에는 제주도기자협회-제주언론인클럽-제주언론학회와 '제주학 및 제주 지역 언론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사진 참조)

〈사진〉 제주학연구센터-제주도기자협회-제주언론인클럽-제주언론학회
'제주학 및 제주 지역 언론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제주학과 제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공동 자료 조사·공유·홍보, △도민 및 언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제주 지역 언어, 문화, 민속, 역사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도적 협력을 실천적 협력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항이 협약서에 명시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상호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폭염에 피해를 입는 도민의 건강 및 안전권의 보장을 공동의 목표로 두고 협력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3) 의제 설정 및 담론 생산

제주학연구센터와 도내 언론 기관·단체 협력을 기반으로 폭염 등의 기후 재난 위기에서 도민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주학 연구와 언론 보도가 공동으로 공유할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가 될 것이다.

기후 재난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영역, 분야가 얽혀있는 만큼 모든 의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센터와 언론 기관·단체 간의 협력 기반에서 함께 기록, 연구할 의제를 합의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하나의 방안으로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건강·안전권'의 의제를 중심으로 폭염을 기록,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한다.

건강·안전권 의제를 합의했다면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담론을 생산해야 한다. 담론 생산의 지향점은 언론사와 도민들의 '기후 건강 리터러시' 제고가 돼야 한다. 기후 건강 리터러시는 기후변화에 대응 및 적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안전 문제와 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판별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김혜윤 · 최슬기 · 채수미, 2023).

기후 건강 리터러시가 추상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및 언론사 간 협력을 통해 제주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후 건강 리터러시의 개념과 사회적 중재 조건이 정리돼야 한다. 개념은 포괄적인 건강·안전 역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구체적 맥락을 반영해야 한다.

보편적 건강·안전권의 관점에 근거해 기후 재난과 관련한 건강과 안전 정보는 모든 도민들이 평등하게 수용,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도민 누구나가 복합적인 건강 문제에 대응 및 적응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건강·안전 문제 및 이슈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기후 건강 리터러시 개념에 포함돼야 한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기후 건강 리터러시의 수준과 중재 지점을 정확히 진단 및 측정해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앞의 책).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후 건강 리터러시의 개념과 사회적 중재 조건을 기준으로 폭염의 재난에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

제인지 사회 구조와 정책적 한계를 비판해야 한다. 담론에는 비판과 문제 제기만이 아니라 대책 수립의 요구가 담겨야 한다. 개인 삶에서 출발한 폭염 재난의 무시무시함을 공동체 전체 문제로 확대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담론이 구성돼야 한다. 동시에 기후 건강 리터러시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 연구의 공론장도 조성돼야 한다.

제주학 연구를 통해서도 담론을 형성할 수 있지만 생산 기간이 언론에 비해 길다. 언론은 매일 기사와 논평을 보도하기 때문에 정치적 효과를 고려하면 담론 생산의 역할은 주로 언론사의 몫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언론사 자체적으로 담론 생산이 쉽지 않은 조건이다. 기관으로부터 전문 자료, 사례 등이 언론사에 제공돼야 한다. 그 자료와 사례는 취재와 보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언론사 자체적으로 기후 건강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부 교육 자료로도 활용돼야 한다.

자료 확보와 제공의 역할은 제주학연구센터가 될 것이다. 기존 확보된 아카이브 자료에 더해 연구진이 추가적으로 확보, 연구한 전문적 자료와 기록들을 언론사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언론사에 제공하는 자료와 기록들이 기후 건강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대중성·보편성이 충족된 자료여야 언론사가 즉각 담론 생산 및 내부 교육 자료로 쓸 수 있다.

4) 홍보 및 교육

국제기구와 국외 주요 국가는 국민의 기후 건강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교육과 홍보가 주요 활동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홍보의 근거 정보를 지속적으로 마련, 제공하는 것이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과 홍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 변화를 도모한다. 동시에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접하는 정책 결정자의 행동 변화도 유도할 수 있다.

즉,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폭염 재난의 위험성과 건강·안전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폭염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알리기 위해 기후 재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지속돼야 한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근거 기반의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연구 보고서를 지속 발간하고, 캠페인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옹호 활동을 하며, 관련 교육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최슬기, 2023).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NIEHS(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는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을 제공하는 웹사이트(Climate Change and Human Health Literature Portal)를 운영한다. NIEHS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교육 자료는 중·고등학생(미국의 9학년 이상, 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 이상)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2022).

미국 기후건강 리터러시 컨소시엄(Climate and Health Literacy Consortium)은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한 대중 교육을 하는 단체의 모임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환경보호청 등 정부를 포함해 의료인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한다. 이 컨소시엄은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건강의 관계에 대해 교육하여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Health Care Without Harm, n.d.).

참여 단체 중 Climate for Health의 경우 의료, 보건, 임상 등의 영역에서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해 알리고, 대응책을 촉구하도록 옹호하는 리더십을 기르며, 일상생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웹사이트를 통해 기후위기와 건강의 리더를 위한 교육, 의사소통과 시민 참여를 위한 자원, 이벤트와 웨비나 진행, 연구 등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또한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실천 가능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하기, 기온을 낮추고 대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나무 키우기 등을 제안한다(Climate for Health, 2022).

국내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다.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 탄소중립중점학교 사업, 지자체별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운영, 대중을 위한 기후 관련 정보 포털 운영(예: 국가기후변화적응정보 포털, 기상청 기후정보 포털, 기후변화홍보 포털, 2050 탄소중립 포털,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시스템 등), 대중 캠페인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알리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최슬기, 2023).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기후 교육은 놀이와 체험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이뤄지고 있다. 많은 프로그램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적인 활동을 포함해 기후 리터러시 제고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 홍보는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기후건강 리터러시에 대한 고려는 전무하다고 평가되고 있다(앞의 책).

제주 사회에서는 국내에서 행해지는 홍보·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당장 외부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는 식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춘 단계적 도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기후 재난에 대한 홍보·교육의 근거 정보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홍보인 경우 건강·안전권을 기반으로 기후 재난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언론은 이를 기사와 논평 등으로 홍보해야 한다.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는 리터러시가 낮은 도민들도 이해하도록 대중적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과 건강·안전권 보장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도 상호 간 협력을 통해 마련,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학아카이브 및 언론사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전달 매체를 이용해 글, 영상, 이미지, 상호 작용형 등 여러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앞의 책).

센터와 언론의 중요한 역할은 기후 재난과 건강·안전권이 정치 논리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도민들이 기후 재난 건강·안전 정보를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고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렇기에 기후 건강 리터러시 제고의 핵심 전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와 기록, 정보 제공이 된다.

기후 건강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도민과 더불어 언론인의 역량 제고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육은 제주학연구센터만의 참여로는 한계가 있다. 기후 재난과 연관된 다층적 영역과 분야를 포괄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전문 기관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센터와 언론사의 협력은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해 센터와 도내 언론 기관·단체는 업무협약을 근거로 올해 8~9월 〈미디어의 기록으로 만나는 제주〉 특강을 실시했다. 이 경험을 키워 앞으로는 보편적 건강·안전권의 이해, 기후 건강 리터러시 역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언론인 및 도민 대상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권 감수성과 기후 감수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폭염 등 기후 재난의 명확한 정보와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문화적 양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

기후 건강 리터러시 교육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로도 이뤄질 수 있다. 인구집단 수준의 인식 변화를 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공동 편익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제주학아카이브와 언론사 홈페이지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적 포털로 기능할 수 있다. 이곳에서 모든 도민들이 편하게 기후 재난과 건강·변화와 건강에 대한 교육 정보를 찾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공론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기후 건강 리터러시 확대를 통한 보편적 건강·안전권의 보장은 홍보나 교육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자체와 지역사회 기관·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 재난은 소수가 아닌 모두에게 해당하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기에 제주학연구센터와 언론사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와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그렇기에 센터와 언론사의 협력과 실천은 지역사회 협력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25, 〈보도자료-폭염 시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2025년 7월 15일자.

국가인권위원회, 2025, 〈보도자료-지속되는 폭염 속 옥외 노동자 생명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2025. 7. 11일자.

김소영, 2025, 〈사라져가는 제지 공장의 장인과 영화 공장의 작가 감독〉, 《씨네21》 1528호.

김지훈, 2025, 〈[기후경제, 제주의 다음 장] ① "뜨거워진 섬, 식어가는 산업"… 기후위기 속 제주경제, 구조가 무너진다〉, 《JIBS제주방송》 2025. 10. 21일자.

김혜윤 · 최슬기 · 채수미, 2023, 〈기후건강 리터러시 평가를 위한 과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40-4.

김홍중, 2023, 〈인류세의 사회이론 2: 울리히 벡과 브뤼노 라투르의 파국주의적 전회〉, 《한국사회학》57.

박상욱, 2025, 〈기후 감수성에 대한 인식과 실재: 기후 리터러시 부재가 만든 악순환〉, 《언론중재》 2025년 가을호.

이부하, 2019, 〈생명·신체의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과 정책》 25.

이재복, 2025, 〈길 위의 함정, 마음 아래의 균열: 일상의 재난과 감통 역학의 장〉, 《사회와 철학》 50.

임연희, 2025, 〈감귤 열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안 채택〉, 《KBS제주》 2025. 10. 22일자.

정용복, 2024, 〈글로컬 시대의 지역방송과 재난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청주 오송 지하차도 재난 사고의 방송 보도 프레임 분석〉, 《커뮤니케이션 이론》 20-3.

제주지방기상청, 2025, 〈보도자료-2025년 10월 제주도 기후 특성〉, 2025. 11. 4일자.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 2025, 〈센터사업-비전〉.

제주학 아카이브 홈페이지, 2025a, 〈검색어-폭염〉.

제주학 아카이브 홈페이지, 2025b, 〈검색어-기후변화〉.

최슬기, 2023, 〈기후위기의 건강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기후건강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23년 6월.

표명환, 2002, 〈기본권보호의무의 이론적 기초〉, 《헌법학연구》 8.

Beck, Ulrich. 1994, "The Reinvention of a Politics." pp.21-89 in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edited by Ulrich Beck, Anthony Giddens, and Scott Lash.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Chae, S. M., Youn, K. J., Go, D. S., Baek, J. H., Shin, J. Y., Jung, H. C.,... Kang, H.R., 2022, *Research on the strategy of 2nd climate change health risk assessment.* Cheongju: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Climate for Health, 2022, Retrieved from https://climateforhealth.org. 2022. 1. 5일자.

Health Care Without Harm, 2022, 〈Climate and Health Literacy Consortium〉, 2022. 2. 15일자.

kbs광주방송, 2025, 〈에어컨 설치 기사 사망‥"노동당국 면죄부 줬다"〉, 2025. 6. 30일자.

Limaye, V. S., Grabow, M. L., Stull, V. J., & Patz, J. A., 2020, Developing a definition of climate and health literacy. Health Affairs, 39(12).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2022, 〈Climate change and human health lesson plan〉, 2022. 2. 16일자.

Stengers, Isabelle. 2009. *Au Temps des Catastrophes: Résister à la Barbarie qui Vient* Paris, France: La Découvert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05). *Education for all: Lite racy for life.* Paris: UNESCO Publishing.

Yum, J. Y., Kim, N. S., Jung, H. W., & Jung, W. H., 2021, Diagnosing and enhancing environmental literacy of citizens to raise green awareness. Sejong: Korea Environment Institute.

토 론

인권 감수성 중심 제주학-언론학 협력 방안 모색

좌장 : 김형훈 (사)제주언론학회장

토론 : 윤희각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철웅 (사)제주언론인클럽 감사

신효은 JIBS제주방송 기자

문정임 국민일보 제주 주재 기자

오유정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MEMO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2026년도 예산안 심의와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가 제주의 밝은 미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444회 제2차 정례회

▸ **2025. 11. 11.**(화) - **12. 10.**(수), 30일간
도정·교육행정 질문, 2026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 현장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주제: 제주학-언론학 교류 세미나 <지역 기록의 시선 '인권 감수성'>
▪일시: 2025.11.21.(금) 15:30~18:00
▪장소: 제주인권교육센터

[토론 녹취록]
- 기록 시간: 16:30~17:50
- 토론 참가자: 좌장-김형훈
토론자-윤희각/김철웅/신효은/문정임/오유정

사회자: 이제 발제 다 끝났고요. 그다음으로 종합 토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제주언론학회장님이신 김형훈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좌장(김형훈): 오늘은 마이크를 좀 많이 잡게 되네요.
순서는 제가 정해서 설명하는 대로 해 주시면 되고요.
허찬행 이사님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낙시성 기사 저도 가끔 놀라긴 하는데 어떤 배우가 사망했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극중에 캐릭터 사망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언론이 진짜 감수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이번에 10개 분야, 12개 분야에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지표로 했다는 것은 시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것은 좀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서 언뜻 드는 생각은 요즘 제가 AI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AI 게이트 키핑을 더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편안하게요. 아까 보니까 2천 개 기사를 분석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런 생각도 해봤고...
우리 이정원 이사님은 굉장히 재미있는 발제였다.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옛날에 제가 취재할 때 예전에 폭염 당시에 그러니까 폭염으로, 제주학연구센터 아카이브 통해서는 폭염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기사로는 쓴 게 좀 사례가 있거든요.
그늘 밑에서 수업했던 걸 취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불가능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고...
역시 우리가 경제적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 노동자하고 취약계층, 새로운 걸 하나 제시를 해 주는데 '기후 건강 리터러시' 이것도 아주 새로운 관점이었고 이걸 보면서도 역시 아~ 우리는 AI를 쓸 수밖에 없구나, AI를 써야 이 무더위에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걸 고민하고 덜 힘들겠구나. 요즘 제가 좀 AI 쪽에 정신이 많이 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토론은 각자 7분으로 정하겠습니다.
문정임 국민일보 제주 주재 기자님 먼저 해 주시죠.

토론자(문정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일보 문정임 기자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두 분 발표를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라서 또 저희도 이제 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유익하게 들었고요.
우선 허 이사님 발표 관련해서 저희가 언론 자유 지수에 대한 이야기는 가끔 나누는데, 이 보도 어떤 콘텐츠에 대한 인권 지수에 대한 것은 사실 저도 이

제 18년째 기자 생활하고 있지만 잘 들어보지 못했던 개념이라서 오늘 내용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게 됐고요.
이런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만드셨는데 그 기준 10가지 기준에는 굉장히 공감하지만 그 기준으로 어떤 뉴스가 그러한 사례인지를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더 좀 세심한 어떤 장치나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의 사례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사례가 나왔을 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하는지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활동이 피드백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자가 개별적으로 그 보도에 대해서 이메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저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기사를 쓰고 다음 날 출근해서 아침에 메일을 열어보면 자살 관련 보도나 영어를 과도하게 했을 때 이렇게 피드백을 주세요.
그 단체에서 그런데 문정임 기자님, 하고 제 실명을 부르면서 이 보도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되게 놀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많지만 기자 수가 수백만 명은 아니니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면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정원 이사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진단과 대안에 모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산량이 적었다, 기후 폭염에 대해서 그리고 수치 중심이었다, 이 두 가지가 큰 틀인데 이것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라고 아까 적시하신 그 숫자는 제가 느끼기에는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잘못하시진 않았겠죠. 그런데 굉장히 적어서 놀랐고 두 번째 지적하신 수치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고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통계는 사람의 고통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후 위기 재난의 인식은 굉장히 깊이 하고는 있는데, 보도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출근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할지를 정할 때 이게 조금 클로즈업 하는 보도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기후 위기가 굉장한 당면 과제인데 그것에 맞게 우리 언론에서 보도 뒷받침을 못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도청에 '도민 안전 건강실'이라는 부서가 있죠. 여기 실장님들도 계시고 여기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이런 과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재난과'가 폭염을 담당하겠죠. 그런데 도청이면은 특별자치도 도청이고 여기에 '자연재난과'라는 과가 있으면 여기에서 심각해지는 폭염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읍면 사무소에서 하는 캠페인하고 달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지만 수치로만 보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슈화하는 일에 우리가 소극적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대응이 미흡한 거죠.
그래서 올여름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도 '자연재난과'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캠페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수치로 보도함으로써 도에서도 수치로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7월 8월 그쯤에 관련된 기사를 한 번 쓰면서 보니까 제주도에서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치로 막 나열을 해요. 도에서 그러면은 <무더위 쉼터>로 몇 곳 몇 곳이 지정돼 있고, 올해는 특히 몇 곳을 늘렸다, 그런 게 다 수치로 나와요. 몇 곳 몇 곳은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더위 쉼터를 무작위로 막 가봤어요. 사실은 주재 기자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심각하니까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무더위 쉼터>는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지만 예를 들면, 대부분이 경로당이거든요. 제일 많은 게. 그런데 경로당은 문을 여는 것과 닫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들이 우리는 외부인 오는 거 싫어, 라고 그분들끼리 결론을 내리면 오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굉장히 멋진 숫자로 460곳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도민들이 더워서 갈 수 있는 곳이 그렇다 그런 건(그렇게까지 많은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언론이 수치로 기사화만 하면 대책도 수치로 밖에 나올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정원 이사께서 대안으로 내세우신 여러 가지 단체들 간의 협력, 또 기자들의 어떤 '기후 건강 리터러시' 제고가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더 직접적인 것은 언론에 한정해서 보다는 보도 관행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떤 것, 여기 나온 단어처럼 실생활을 좀 더 클로즈업 해야 되고 입체적으로 다뤄야 돼요. 아까 jibs 사례가 나왔는데 사실 감귤과 수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주도 사람들이 그걸로 많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들의 일이죠. 사람의 안부와 관련된 일이고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그게 아쉬운 거죠.

저는 저번에 한번 이와 관련해서 보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위라는 것을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저희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로만 써야 돼서. 그러다가 저희 엄마 사례를 통해서, 70세 넘은 누구는 도청의 이런 권고에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서 10만 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돈도 아끼고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걸어서 매일매일 15분 거리에 있는 하귀하나로마트를 가고, 또 외도에 있는 병원에 고지혈증 약을 받으러 가고, 또 애월국민체육센터에 헬스를 하러 가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 더워지면서 걸어 다니는 게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분이 뭐가 힘든지 가만히 그 대안을 생각해 보니 하귀우체국에서 하귀하나로마트를 오가는 도중에 나무가 다 소나무로 가로수가 소나무인데 그게 텀이 너무 넓어서 그늘을 못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늘만 조금 갖춰줘도 걸어 다니는 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33도가 되어도.
그런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얘기해 주는 보도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언론 그렇게 큰 힘은 아니지만-어쨌든 방송이나 조금 더 파워를 가진 그런 언론사에서 많이 이렇게 보도를 하면 행정에서도 더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언론 보도가 기후와 관련해서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참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이 발표하신 내용 공감하고 또 잘 들었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제주학연구센터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록을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제주학연구센터가 미디어에 포함이 된다고도 볼 수 있어서 계속 이렇게 사회적인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장님 힘내셔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좌장(김형훈): 잘 들었습니다. 7분 내로 하라고 했더니 10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정임 기자님께서는 허 이사님 이렇게 기준을 새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피드백이 되게끔 해달라. 그

런 요구를 했고, 이정원 이사님 관련해서는 언론이 수치로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보도 자료도 수치로 내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례를 슬쩍 끼워가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직접 사례들면서요. 그러면 다음은 신효은 JIBS제주방송 기자님입니다.

토론자(신효은): 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효은 입니다. 시간을 잘 준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권 감수성과 관련된 연구 굉장히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제가 지역 미디어의 포털 사이트에서 어떻게 큐레이션 되고 있고 어떻게 단순 보도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연구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또 내용도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지역 언론사로서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주도의 성평등 정책관이 도의회에서 한 도의원이 '가열린 몸으로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라고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정작 그분이 굉장히 불편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서 따옴표 받아쓰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 보도에 대해서 기자들을 통해서 문제를 또 제기를 하셨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걸 접하고 우리 기자한테 "그거 문제 되니까 빨리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수정을 했는데, 어떻게 수정할지를 제가 모니터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가 '여성스러운 몸'으로로 표현을 좀 바꾼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에 맞게 고쳤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기분이 안 좋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다 수정을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사소할 수 있는 그런 인권과 관련된 표현들이, 표현의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반복이 되느냐. 제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문제의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털에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언론사가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모니터링 하시는 것은 80여 개의 언론사 CP 언론사라고 하는 언론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론사들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경쟁을 합니다.

눈에 잘 띄어야 되고, 그리고 눈에 잘 띄어야 조회 수를 많이 얻고, 그 조회 수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기자만 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의 고용 형태를 봤을 때 계약직이거나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도 한번 좀 지금 당장 이 연구에 반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더 자극적이고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을 뽑는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에 하루 이틀 이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테면 포털 뉴스가 연성화 된다든지, 아니면 연예 뉴스로 도배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간의 여러 가지 자성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를테면 '엔지 팩터(NG Factor)'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연예 뉴스를 쓰는 경우에 엔지 팩터를 준다. 그럼 감점을 줘서 돈을 덜 주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권 감수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지수를 지금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포털사나 이런 데 제안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의 기준을 하나로 삼게 된다면 이런 문화가 조금 더 개선되

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기후 재난과 관련해서 이 교수님의 어떤 시각, 그리고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깊은 그런 연구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제주학과 언론학이 새로운 의제를 찾아서 언론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떤 의제가 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고 제안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난개발이라는 건 기후 환경 위기와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중문에 살고 있던 지역 주민들이 중문관광단지 개발할 때 예례동으로 모두 다 거주지 터를 옮겼거든요. 그 땅을 다 팔고요. 그리고 예례단지에서는 또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개발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이 된 상태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농지를 또 팔았다가, 다시 소송했다가, 지금 또 이어서 새로운 국면에 이제 접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주학연구센터라는 곳은 제주에 대해 기록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간의 어떤 역사적인 진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의 문제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오늘 기후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만 기후가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섬 속의 섬과 같은 지역입니다. 폭풍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놓였을 때 주민들의 이동권이 굉장히 제한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 서쪽의 섬에 사시는 분들의 인권이라든가. 건강권, 이동권과 관련해서도 제주학연구센터 그리고 언론에서 같이 공동으로 의제로 삼아서 현황과 미디어 보도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같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좌장(김형훈): 시간 잘 맞춰 주졌습니다. 신효은 기자님께서는 성평등 정책관에 관한 기자들의 경험 사례를 말씀하면서 기자 스스로의 감수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게 자성이나 교육만으로는 어렵다는 점. 왜냐하면 이게 제주 지역은 안 그렇지만 육지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댓글 많이 달린 기자들한테 상을 주고, 조회수 많은 기자들한테 상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코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쟁을 이제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 개개인에게 인권 감수성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자성, 스스로 이렇게 자성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정원 박사님의 발제와 관련해서는 제주학연구센터와 언론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유정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론자(오유정): 제주학연구센터 오유정입니다. 귀중한 발표를 해주신 허찬행 상임이사님과 이정원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언론학을 전공하고 지금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학 사업을 맡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둔감하지는 않았나 오늘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저희 둘째가 8살인데요.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 “엄마 그거 인격 침해, 인권 침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그리고 본인들도 인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받다 보니까 저희가 크던 세대와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는 비가 오면 하교하는 것을 무척 걱정해서 우산을 챙겨 갔는지 얘가 비 맞고 집에 오지는 않는지 걱정은 하는데, 날씨가 무더울 때 집에 어떻게

오는지는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폭염인데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은 거, 이거는 아니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인권 감수성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있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먼저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찬행 이사님께서 발표에서 강조하셨듯이 인권 문제는 법정을 위반했느냐의 소극적 형태보다 위법이 아닐지라도 비윤리적인 보도를 피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서 같은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단어 몇 개 차이로 특정한 직업과 성별, 연령, 지역 등에 따라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요. 이는 지역학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사람을 배제하거나 낙인찍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더욱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다만 네이버 제휴 언론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5개의 기사를 표본으로 모니터링 하셨는데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상위 랭킹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모니터링 표본 선정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의 주요 뉴스 가운데 무작위 선정 등 다른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진 이정원 박사님의 발표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라는 재난은 건강과 안전권, 즉 '사람의 안부'를 중심에 두고 다시 해석하는 연구였습니다. 저는 센터 쪽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제주학 아카이브에 축적된 기후변화 관련 기록물들도 산업 정책이나 재해 예방 등 정책 개발 목적이 많고, 정작 기후 위기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주학 아카이브의 정책 환경 중심의 기록 외에도 취약한 삶의 조건, 건강과 안전, 노동과 재난 위험을 다층적으로 기록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건강 및 안전권의 감수성이 제주학과 언론학의 공론장에서 활발히 형성, 확산되고 교류 융합돼야 한다는 박사님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또한 제주학연구센터가 구축하는 플랫폼은 도민들의 안무를 끊임없이 묻고 기록하고 건강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공하는 지역 미디어가 돼야 한다는 그런 주문도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우리 센터는 도내 언론 기관 단체 간 업무 협약을 통해서 <미디어의 기록으로 만나는 제주>라는 특강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 건강 리터러시' 역량 교육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 기관의 전문 자료를 생산하는 센터와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는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서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를 들면 폭염과 노동, 해녀, 건강, 이주민, 고령층 등 삶의 취약성을 중심에 두고 제주학과 언론학 또는 우리 센터와 언론사 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지역사회에 큰 파급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 센터가 기존에 확보된 아카이브 자료 외에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연구해야 할 자료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의 두 발표는 서로 다른 연구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바로 기록이 사람의 존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분의 발표가 제주학과 언론학이 앞으로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자 모두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장(김형훈): 오유정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허찬행 이사님과 관련해서는 표본 선정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아까 개인적인 얘기 했었죠. 비 올 때 걱정한다는 거,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 했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기상 상황을 모르잖아요.
비 오면은 아이들이 다 기다려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 우산을 가지고 오세요. 저는 육지에서 살았거든요. 제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육지 어머니들은 다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생생하게 저는 기억에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정원 박사님과 관련해서는 협력 관계는 공동 프로젝트 특히 해녀라든지 이주민 그런 계층들이 어떻게 폭염에 대응하는지, 그런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희각 부산외국어대 교수님인데 멀리서 오셨습니다. 학교는 부산외국어대 이지만은 사시는 것은 또 창원이더라고요. 창원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오늘 또 비행기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토론자(윤희각): 반갑습니다. 윤희각이라고 합니다.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앞서 토론하신 분들과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핵심적인 부분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찬행 이사님 같은 경우는 인권 지수 설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라는 점에서 먼저 북한 관련 '카더라'식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언론인들도 계시지만 가장 힘든 인용 보도는 북한과 외교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를 보면 "복수의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혹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하면 민원 문제에 대해서는 진영은 절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자살 보도 관련해 하나 말씀드릴 텐데, 자살 보도는 지금 4.0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2004년도에 기자협회에서 만들었고, 2024년도에 조금 더 발전시켜서 4.0까지 만들었고, 심지어 언론중재위원회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아예 못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하는데 반대로 보도가 아니고 아침 방송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은 예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당수의 연예인들이 자살을 결심 안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왜 편집국과 보도국의 보도에만 이렇게 신경을 쓸까? PD 저널리즘 그리고 이 PD와 함께 제작을 하면서 단어를 쓰는 작가 저널리즘에 대한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일반 뉴스 시청률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얼마나 시청률이 높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참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범죄 성폭력. 일반 언론들 이렇게 범죄 성폭력 보도 요즘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JTBC의 <사건 반장>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시면 그냥 대놓고 다 합니다. 요즘 프로파일러들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대놓고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면요). 결국은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보도 뉴스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신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데 네이버의 랭킹 뉴스 같은 경우는 언론사가 5개 뉴스를 내놓는데 알아서 해줬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편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5개 뉴스 중에 대부분 내가 보니까 한 2개 정도는 종이 지면 뉴스, 그러니까 1차 데스크 차장과 2차 데스크 부장 편집국장의 데스크을 거친 것이고 나머지 3개는 그냥 인터넷 뉴스팀 기자가 적고 바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섹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랭킹 뉴스에서 보다는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닷컴의 뉴스를 정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뉴스를 선정하든지 이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중제위원을 좀 오랫동안 했는데, 예전에는 반론권 그리고 정정 보도에 대한 내용을 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지금 말씀하신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수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원 이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단어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좀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기사도 실리고 했는데 재미있는 기사가 몇 개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폭염에는 삼다수가 제격” 관련 기사가 이겁니다. 봐도 알겠지만 이 주체는 기자가 아니고 아마 제주도 개발공사가 연락을 했겠죠.
두 번째 온열 질환 예방과 관련한 온열 버스를 운행한다 했는데, 결국 보니까 농협 제주본부의 보도 자료입니다. 무더위 쉼터가 주제인데 제주도립미술관이 무더위 쉼터로서 좋다 더우면 거기로 가자, 이런 주제의 기사입니다.
제주 온열 환자 5년간 455명 그냥 일반 제주소방본부의 보도 자료예요. 폭염과 건강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사는 반 혹은 경제계의 일방적인 보도 자료뿐입니다.
놀라운 게 저는 기획 기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게 너무 놀라웠던 부분이고, 일반 기사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그걸 제주가 아니고 부산 서울로 대입하면 그대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2016년도에 그때가 세계적으로 폭염이었습니다. 제주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한 달 반 살았는데 방 하나가 30만 원이더라고요. 너무 싼 거 아닌가, 한 달에 사용하는데. 그러면서 너무 좋다 해서 살아봤는데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거의 저는 제주의 폭염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봤어요. 이거 제주 왜 덥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집에 가야 되나? 저한테 가이드를 주는 기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시의적절한 연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논문을 계속 이어가시려면 참고로 ‘더 랜싯 카운트다운(The Lancet Countdown)’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게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사이트입니다.
글로벌 사이트인데 이게 생태학, 경제학, 의학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좌장(김형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왜 우리 기자들만 열심히 그동안 했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TV는 자주 보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PD 저널리즘 기자 아니 기자가 아니고 작가 저널리즘, 뉴스 시청률에만 급급한 오히려 그런 쪽의 문제 제기도 한 번 있어야 된다,라는 것.
계속된 얘기지만은 허찬영 이사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계속 연구 단계지만은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이정원 박사님과 관련해서는 직접 이렇게 제주에 사시면서 느꼈던 경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더불어 폭염과 관련해서는 제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받아쓰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을 파고드는 기획 기사가 없다는 점, 제가 지금 현직 기자로서 조금 가슴 아프게 느끼고 내년 여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목표 토론해 주실 분은, 이 토론 덕분에 제가 간만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입사 동기입니다. 김철웅 제주언론인클럽 감사님입니다.

토론자(김철웅): 반갑습니다. 김철웅입니다. 한 30년 신문쟁이하다가 지금 귤 농사 지으면서 택배 하다가 나와 손이 좀 곱지 못하지만 말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학생 조례안을 지난 18일 폐지했습니다. 물론 교육계하고 학부모는 반발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실은 교육 조례안 폐지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확실한 용어를 정의하기 어렵지만 조례 제정으로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 못지않게 그로 인한 부작용 아니면 역작용 등이 확실히 발생한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발제문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인권 감수성에 대한 부처의 시각, 중성의 시각, 좀 더 곱게 표현하면 연구자의 시각, 언론인 신분적인 시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선의 여지를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인권지수 설계 과정으로 7페이지에 보면 다섯 번째 '보호자나 가족의 어려움 장애를 극복하고 무언가 성취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쁘다는 식으로 사례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게 나쁜 걸까요? 이런 게 없으면 뭘 전달을 해야 될까요? 감동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보는 시각의 차이겠죠.
그리고 '한국인 다되었네, 김치 잘 먹네' 이거 뭐 나쁜 겁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인 겁니다. 한국에 와서 노력해서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한국 사람이 영어 잘하네, 그게 나쁜 겁니까? 하여튼 그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서 이렇게 써왔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꼰대'라는 단어, 특히 신동엽이라는 개그맨이 고착화시켰을 텐데 '아재 개그'라는 거, 아주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아재 개그'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유머 감각이 있는 어른이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나쁜 사람 오래된 사람으로 박제 시켜버리는 아주 나쁜 사례가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5의 5, 봤거든요. '피해자 또는 일탈적 행동을 다룰 때 가정형태 등에 대한 부분을 부각'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뉴스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도 분석을 적용하려면 뉴스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살 보도와 관련된 건에서도 극단적인 선택, 동반 자살, 투신 자살 등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풀어서 전달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리지 않는다는 게 저희 언론사에서 했는데 이번에 이문교 대선배님께서 (함께 기자생활)했을 때는 저희들 신문사에서 '관리사에서 농약 제초제 그라목손을 먹고 죽었다' 이렇게 썼잖습니까? 옛날에는. 그걸보면 격세지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진행 과정에서 보면 페이지 14페이지 위쪽 되겠네요. 사례2 "여배우 저격한 홍준표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 어디 갔나" => 배우라는 직업은 있어도 '여배우'라는 직업은 없다. 그런데 그 여배우라는 남배우라는 직업이 다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여자 배우, 남자 배우. 그래서 제목이

여배우라고 표현한 것은 짧은 문장이에요. 수용자들이 궁금해할 정보를 하나라도 더 담는 걸로 봐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하고 사안의 본질과 관계없이 성별, 연령 등의 구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다는 게 한 30년까지 신문 제목을 만들어본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험 모니터링에서도 '성별, 연령, 장애, 출신국가, 종교, 고용형태'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고 그걸 표시하는 것은 수용자들이 궁금해 할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정보라고 봅니다. 그냥 누가 다쳤다고 하면 누가 다쳤을지 궁금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필리핀 사람 데려가서 고생하면서 좀 다쳤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차포를 떼어버리면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고혈압에 안 좋다고 소금을 안 넣어버리고, 혈당을 높인다고 단맛을 빼버리고, 손님이 무슨 맛으로 음식을 먹겠습니까? 뉴스에도 최소한의 정보는 많이 담아야 되고,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게 뉴스 전달 과정이라면 수용자들이 효과를 정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양념, 팩트는 어느 정도 넣어야 된다.
그런데 인권 차원에서 빼버리면 맹맹해서 뉴스의 가치가 없어지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밸런스의 문제인데, 균형 감각 그게 중요한데 정치권도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간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1페이지 첫 줄에 보면 '제주의 위기,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뚝뚝 뜬다고 했는데 언론에서 지적된 것 같은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아니고 무한공항 여객기 참사죠. 그게 주체가 제주항공 여객기였고 차라리 이게 더 지적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21페이지 밑에 보면 '유재석을 믿고 샀는데', 비타민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연예인들도 광고에 최소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양화로, 마동석이 나와가지고 고급 고기 속이면서 250명의 2천억 피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광고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것은 해야 될지, 안 해야할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은 돈 받고 광고한 사람에 대한 당연한 어찌 보면 처벌이라고 봅니다. 정치권 정치자금 수수해서 나왔을 때 포토라인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좀 구별해 보시고요.
그 결론처럼 첫 시도로서 의미는 있지만 지속적인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지평 문화에 대한 개선이 적지 않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첫 시도에 큰 찬사를 보냅니다. 허찬행 한국언론학회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정원 이사는 저의 언론사 후배이기도 한데, 이 문제는 인권 감수성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게 소비될 수 있느냐, 뉴스로서 소비될 수 있느냐, 뉴스를 생산하고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에 반영할 동기가 될 만큼 임팩트 또는 재미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춘수의 얘기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꽃이 됐던 것처럼 수용자들이 그것을 선택해 줬을 때 뉴스로서의 정보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기후건강 리터러시'라는 것을 참 생소하게 들었는데 덕분에 공부하면서 지역 언론 폭염 보도를 고찰하면서 미디어의 인권 감수성 부재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참 부끄러운 심사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정원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김형훈): 원래 김철웅 기자님이, 지금 감사님인데 콕콕 잘 쏩니다. 잘 쏘는 걸로 유명했고 제주사회에 물어보면 다 압니다.
이의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허찬영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제시했던 인권 감수성과 관련해서 시각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고요. 7쪽 8쪽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차포 다 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서 음식을 먹는데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소금을 아예 넣지 않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허찬행 이사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아주 좋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이정원 박사님과 관련해서는 진짜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뉴스를 만들었을 때 소비자들이 과연 뉴스를 볼까 찾아볼까 그러니까 공급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어쨌든 정보를 그러니까 재미도 다 부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정원 이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도 공통으로 나올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참석자: 저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송영훈 교수입니다.
제가 사회대 학장을 맡고 있는데 오늘 최낙진 학장님 뵈러 왔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도 있고, 궁금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것도 있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일기 예보 MBC 일기 예보에서 제주 강원 도서 산간벽지에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겠습니다,라는 방송을 했던 걸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시리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내일 생기리 하러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할 때 이 일기 예보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강원도 또 제가 이제 강원도에 갔잖아요. 느끼는 게 지역을 그렇게 혐오적인 차별 문제로 지역을 거는 것은 우리가 좀 걸러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지역을 구분해서 특정해서 보도해 줘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날씨 방송이었지만 어쨌든 특정하지 않고 너무나 모호하고 자의적인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올여름에 이렇게 제주도 폭염이 있었지만, 또 강릉에는 물 부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물 부족 보도 사태를 보면서 보도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느꼈던 건, 이 강릉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워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사에서 간혹 간헐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언론이 보도를 시작하니까 무차별적으로 강릉의 행정은 아주 무력했던 것처럼 아주 비효율적이고 그랬던 것처럼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던 게 만약 지역 언론이 이때 탐사 보도를 좀 더 일찍 했으면 그냥 워닝 사인 한두 개 주는 게 아니라, 했으면 강릉의 이미지가 그렇게 무기력하고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졌을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역 언론이 지역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 방식에 따라서 중앙의 언론이 지역을 다루는 그런 방식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언론 하시는 분들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참석자(최낙진): 송 교수님 온열 질환은 상당수가 체질인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좌장(김형훈): 그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자(허찬행): 그냥 말씀드려도 되겠죠. 좋으신 말씀 잘 듣고 참고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이 기준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과정이야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참고도 하긴 했지만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분명 있고요, 주신 말씀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랭킹 뉴스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8월달에 측정기를 시험 모니터링 했을 때는 기사 15건 20건 중에서 두드러지게 좀 이런 것들은 문제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1월부터 5월까지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국가인권위에서 모니터링단 활동비를 지원받으려고 계획상으로 1월부터 5월 보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뉴스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 비중이 탄핵 개헌 관련한 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또 그리고 그 한계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표본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주신 의견들을 참고해서 더 잘 다듬어서 내년에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시민사회에서요. 그런데 제안 주셨던 것처럼 포털의 어떤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시스템들, 그래서 포털 쪽에도 그런 평가 관련해 갖고 이용자들의 평가 관련해서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시도를 해보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문정임 기자님께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해당 기자한테 직접 이메일로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들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김철웅 감사님께서 아니 정보 제공, 차 떼고 포 떼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관점의 차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일일이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존 문항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각종 신문사라든지, 윤리 강령이라든지, 보도 준칙, 이런 데 있던 문항들을 고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문헌만 놓고 보면 문항에 있는 표현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불필요하고 과도하고 본질과 크게 벗어나고 굳이 예를 들어서 그 여배우 같은 경우도 그냥 배우 김기리 씨 하면 되지 굳이 거기 여배우를 왜 붙습니까? 불필요한 성의 부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유재석 그 부분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유재석 믿고 사는데 광고 모델이고 하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 그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은 좀 결이 다릅니다. 유재석을 보고 믿고 샀다,라는 것은 그 누군가의 발언이 아니고요, 그냥 기자가 그렇게 붙인 겁니다.
비타민의 문제인데 비타민 광고 모델 유재석이더라, 유재석 믿고 샀는데 있지도 않은 그런 인터뷰이기도 하고요. 없는 것에 대해 기자가 그냥 주관적으로 붙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맥락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냥 이 자체의 어떤 문안에 있는, 그 문헌대로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하지만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보 제공에서 꼭 필요한 부분과 불가피성이 있는 부분과 거기서 정말 벗어난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는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신 말씀 참고해서 잘 받아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이정원): 예, 저도 짧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지적과 제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발제 부분을 준비한 건 사실은 미래를 그럼 미리 지금부터 대비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 기후 재난이라는 것은 좀 융복합적입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

를 가리지 않고, 또 더 무서운 게 우연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측 가능한 대응으로 이제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거든요.
재난이 터졌을 때 바로 수시로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터졌을 때 바로 우연하게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학문과 영역과 기관이 융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이것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지, 특정 부서 특정 기관만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얘기한 기록으로 돌아가서 저는 언론사는 충분히 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질도 있고 역량도 있고 그리고 저는 시민들도 지금 우리가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시행했는데 시행률이 꽤 높았거든요. 제주도가.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어느 정도 변화 의지가 저는 시민에게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자료까지 안 오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언론사는 불을 끄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호스를 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수원지가 메마르니까 지금 쓸 물이 없으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원지를 누가 채울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제주학연구센터가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주학연구센터가 연구하는 분야 자체가 사람 중심에다 그리고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에 있는 기관 중에 연구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멸과 문화의 소멸을 걱정해서 그것을 소멸하기 전에 다 기록을 하자 라는 취지에서 지금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폭염 재난으로 사그라질 수 있는 그런 도민들의 생명 안부 건강을 미리 그것을 체크해 위기를 감지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변화가 가장 빠른 곳이 저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주학연구센터가 지금 구조적으로 자연과학에 대한 분야 연구원이 사실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은 자연과학 분야인데 연구원은 사실 자연과학 분야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후 재난 분야는 자연과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주학연구센터가 더 조직을 키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또 독립적인 연구 기관으로서 진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좋은 의제가 저는 기후 재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걸 의제로 삼아서 연구를 실행했을 때 아마 자연과학 분야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역적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획 구조가 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주학연구센터와 언론학의 협력을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장(김형훈): 이제 끝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세미나지만은 제주학연구센터가 이 자리를 잘 마련해 준 덕분에 서울에서도, 춘천에서도, 부산에서도,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오게 되었고요.
세미나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말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집에 가서, 회사 가서, 어디 돌아다닐 때 글로 옮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또 저 스스로도 내년 폭염 때는 반드시 기획 기사를 써야 되겠구나 다짐하게 됩니다.
딱 1분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다 참석해 주셔서 좋은 얘기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약]

■ 문정임

언론 자유 지수에 대한 이야기는 가끔 나누는데 보도에 대한 인권 지수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개념이라 오늘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며 이런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0가지 기준에는 굉장히 공감하지만 그 기준으로 어떤 뉴스가 그러한 사례인지를 골라내는 작업을 할 때는 더 좀 세심한 장치나 노력은 필요한 것 같음. 기자에게 피드백 할 때는 개별적으로 보도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효과가 좋은 것 같음.

언론이 수치로 기사화만 하면 대책도 수치로 밖에 나올 수 없으므로 실생활을 좀 더 입체적으로 다뤄야 함. 언론에 한정하기 보다는 보도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언론이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사례를 보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음.

■ 신효은

인권 감수성과 관련된 연구 내용이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듦. 지역 언론사들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경쟁을 하고 눈에 잘 띄어야 되고 조회 수를 많이 얻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기자의 고용형태도 문제일 수 있음. 인권 감수성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었으니 포털사 같은 곳에 제안한다면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함.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에 대해 기록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후 환경 위기 같은 그간의 역사적인 진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의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 더불어 기후와 관련하여 섬 속의 섬과 같은 지역 주민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동권, 건강권과 관련해서 센터와 언론이 같이 공동으로 의제로 삼아서 현황과 미디어 보도를 하는 아이디어를 드림.

■ 오유정

발표에서처럼 위법 여부가 인권 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단어 몇 개로도 차별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학에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 모니터링 표본 선정 과정에서 상위 기사를 표본으로 삼기보다 무작위 선정 방식도 고려할만 하다는 생각임.

제주학연구센터의 아카이브가 발표에서처럼 기후 위기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에 관련하여 다층적으로 기록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도민들의 건강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공하는 지역 미디어가 돼야 함. 기후 건강 리터러시 역량 교육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함. 제주학과 언론학이 앞으로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함.

■ 윤희각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 북한과 외교 문제의 인용 보도가 힘든 것처럼 설계 과정에서 참고해 보면 어떨까 싶음. 뉴스 보도 보다 시청률이 높은 TV예능 프로그램의 PD 저널리즘과 작가 저널리즘은 신경쓰지 않는데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편집국과 보도국의 보도에만 신경을 씀. 네이버 랭킹 뉴스에서 보다는 자기의 뉴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음.

제주도 폭염에 대한 기사를 검색했으나 관련 기관의 일방적인 보도 자료뿐이고 기획 기사가 없는 것에 놀라움. 기후 재난에 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함.

■ 김철웅

서울시 학생 조례안 폐지에 찬반이 있는 것처럼 발표에 대해 이의가 있음. 사례들 중에는 수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이지 인권 차원에서 빼버리면 맹맹해서 뉴스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입장임.

인권 감수성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게 소비될 수 있느냐, 뉴스로서 소비될 수 있느냐, 뉴스를 생산하고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에 반영할 동기가 될 만큼 임팩트 또는 재미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함.

<끝>